

2005년도 예산안 토론회

- 일 시 : 2004년 10월 25일(월요일)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1층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5년도 예산안 토론회 진행순서

14:00~14:10

개 회

14:10~15:20

주제발표

- 사 회: 오연천(서울대 행정대학원장)
- 발 표: 장병완(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신철식(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신해룡(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15:20~16:40

토 론

- 강봉균(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최경환(한나라당 국회의원)
-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김효석(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박태규(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강웅선(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실장)
- 윤영진(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16:40~17:00

방청석 질의·답변

17:00

폐 회

발 표 주 제

I. 2005년도 나라살림 개요 / 1

➤ 장병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II. 2005년도 국세세입예산안 주요 내용 / 49

➤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II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1

➤ 신철식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IV. 「2005년도 예산안」 검토과제 / 91

➤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05년도 나라살림 개요

2004. 10.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장 병 완

목 차

I.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 / 5

II. 2005년 나라살림의 모습 / 8

- 1.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8
- 2. 재정규모 9
- 3. 재정 수지 10

III. 2005년 나라살림의 중점 / 13

- 1. 2005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 14
-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22

IV. 2005년 나라살림의 분야별 지원내용 / 24

I.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성과관리제도 시행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단년도 위주 재정운영을 중장기적 재정운영으로 전환

- 향후 5년간('04~'08)의 총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주요 재정사업별 지출규모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
- 중장기 국정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각 부처는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및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촉진
 - 일반회계 요구 증가율 : 30%수준 → 11.7%
 - 계속사업 구조조정(△2.7조원) 및 신규사업 반영금액(3.0조원)이 '04년보다 2배 수준 증가

□ 성과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목표지표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를 사후평가 강화로 보완
- 금년에는 22개 기관으로부터 성과계획서(전체 사업의 30%수준)를 제출받아 예산 편성과정에 활용
 - 성과목표와 재정투자계획을 연계·분석하여 '05년 예산을 조정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시스템 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각 지자체가 총액범위내에서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
- 재원과 기능을 함께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 국고 보조사업 163개(1.1조원)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포괄적인 재원인 교부금을 확대(교부세율 : 18.3 → 19.13%)
- *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 예시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 추진

-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등 국가 전략 R&D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부처간 중복여부·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

◆ '05 예산(안) 구조조정 현황 ◆

□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계속사업 구조조정 (예산감액) 및 신규사업 반영규모가 예년
보다 2배 수준 증가

○ 사업 우선순위 및 성과, 집행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축소·
중단 또는 통폐합 → 신규사업 소요에 충당

☞ A부처는 총 204개 단위사업(기금포함)중 35개 사업 폐지 (△1,028억원)
→ IT839 전략사업 등에 집중 투자(증액 1,296억원)

☞ B부처는 정상적 경비를 절약하여 연례적으로 부족한 필수경비에 충당
· 특근매식비·여비 감액 (△11억원) → 형사보상금 증액 (5억원)
여성조사실 신설 (7억원)

☞ C부처는 경비함 운항방식 변경을 통해 유류비 예산 증가 억제
· 6일 주기교대, 순항 경비 → 8~10일 주기교대, 표류거점 경비
· 유류비 예산 : ('04)351억 → ('05)390억('04 : 17% → '05 : 11% 증가)

		'04예산	'05예산안	증 감
· 계속사업 구조조정 ¹⁾	사업수	312개	409개	97개
	금 액	△1.6조원	△2.7조원	△1.1조원
· 신규사업 반영	사업수	345개	468개	123개
	금 액	1.5조원	3.0조원	1.5조원

주: 1) 전년대비 감액사업 (자연감소분 및 지자체 이양사업 제외)

□ 앞으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

○ '06년 지출한도 통보시 사업별 성과분석에 입각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지침 시달 예정

II. 2005년 나라살림의 모습

1.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 내년도 우리 경제는 5%대의 실질성장 예상

-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적극적 경제정책 노력 등을 감안할 때
-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 전망(경상성장률 8%수준)

□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어려운 상황

- 세입은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2.7조원)
- 지출소요는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안보여건 변화 등으로 증가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되, 재정적자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재정지출 확대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08년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
- * 관리대상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 소요를 제외

2. 재정규모

□ 내년도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04예산 대비 9.5%(11.4조원 증) 증가한 131.5조원

- 공적자금 상환과 양여금 폐지 등 예년과 다른 요인 제외시 일반회계 증가율은 5.5% (6.6조원 증)

(단위: 조원, %)

	'04예산	'05예산안	증감	증감률
■ 일반회계 지출(A)	120.1	131.5	11.4	9.5%
■ 채무상환(B)	2.1	5.3	3.2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회계 전환분(C)	-	1.6	1.6	(교통세의 14.2%)
■ 특이소요 제외(D=A-B-C)	118.0	124.6	6.6	5.5%

- 세외수입 감소, 채무상환 증가 등으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가 금년 2.5조원에서 6.8조원으로 증가(4.3조원 증)

(단위: 조원, %)

	'04예산	'05예산안	증감	증감률
■ 일반회계	120.1	131.5	11.4	(9.5)
■ 국세수입	111.2	121.0	9.8	(8.8)
■ 세외수입	6.4	3.7	△2.7	(△42.4)
■ 채권발행	2.5	6.8	4.3	(168.8)

□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순계)는 금년보다 7.5% 증가한 168.2조원 수준

(단위: 조원, %)

	'04예산	'05예산안	증감	증감률
■ 예산 순계 (총 계)	156.5 (182.4)	168.2 (195.7)	11.7 (13.4)	(7.5) (7.3)
· 일반회계	120.1	131.5	11.4	(9.5)
· 특별회계 ¹⁾	62.2	64.2	2.0	(3.2)

주: 1) '05년 폐지되는 철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57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 수준 증가한 320조원

-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도 금년보다 7% 수준 증가 (23.6 → 25.3조원)

(단위: 조원, %)

구 분	'04(A)	'05안(B)	증감(B-A)	증감률
■ 전체 운용규모(57개)	298.3	320.2 ¹⁾	21.9	7.3
■ 사업비 규모(57개)	74.8	69.2	△5.6	△7.5
■ 사업성기금 (37개)	23.6	25.3	1.7	7.4
■ 사회보험기금 (6개)	17.0	20.1	3.1	18.2
■ 금융상계정성기금 (14개) ²⁾	34.2	23.7	△10.4	△30.6

주: 1) '05운용규모(320조원) = 사업비(69조) + 차입금상환·내부거래(135조) + 여유자금운용 등 (116조)

2) 금융구조조정 지원(△7.5조), 대러차관 대지급(△2.0조) 등으로 금년보다 감소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 증가 (196조원→208조원)

3. 재정 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는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금년보다 다소 악화되어 GDP대비 1.0% 적자

(단위: 조원)

	'04예산	'05예산안	증감
■ 전체 통합재정수지(A) (GDP대비, %)	3.3 (0.4)	5.6 (0.7)	2.3
·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B)	22.4	25.8	3.4
·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C)	△12.0	△12.0	-
■ 관리대상 재정수지(A-B-C) (GDP대비, %)	△7.2 (△0.9)	△8.2 (△1.0)	△1.0

< 참고 1 > 국가채무 관리

□ 국가채무는 '06년까지는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증가가 불가피 하나 '07년부터는 GDP대비 비율이 '06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내년 증가분은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에 주로 기인

■ 공적자금 국채전환 +12.0조원, 외평기금 채권 +16.2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6.8조원, 주택채권 +3.3조원 등

	'03실적	'04전망	'05전망	'06전망	'07전망	'08전망
* 국가채무잔액 (조원)	165.7	204.5	243.4	271.2	282.9	296.1
(대GDP 비중, %)	(23.0)	(26.2)	(28.9)	(29.8)	(28.8)	(27.9)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26.2%는 OECD국가의 평균 7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IMD평가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2위

(단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평균
국가채무비율	62.8	157.3	65.1	71.1	51.6	76.0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04.6), '03년말 기준

□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38% 수준

○ 나머지는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의 형태로 자산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62%)

국가채무 ('04년말)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204.5조원 (100.0%)	78.3조원 (38.1%)	126.2조원 (61.9%)

* 국가채권('03년말) : 130.6조원

□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06년부터 점차 감축하여 '08년 이후 중단 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 참고 2 > 조세부담률

- '05년 조세부담률은 소득세 감면(1%p), 특소세 폐지(12개 품목) 등에 따라 '04년과 비슷한 19.7% 유지

	'03	'04	'05	'06	'07	'08
■ 조세부담률(%)	20.5	19.8	19.7	19.8	19.9	20.0
■ 국민부담률(%)	25.5	25.0	25.1	25.6	25.8	26.3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부담률은 '08년도까지 20%이내 수준으로 유지
-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 성숙함에 따라 다소 증가 전망

- OECD 회원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며, 과거 선진국의 1인당 GDP 1만불 달성시기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

- OECD 30개국 중 조세부담률은 4번째, 국민부담률은 2번째로 낮은 수준

(단위: %)

	한국 ('03)	OECD 평균('01)	영국 ('02)	프랑스 ('02)	미국 ('01)	일본 ('01)
■ 조세부담률	20.5	27.5	29.7	27.7	21.8	17.0
■ 국민부담률	25.5	36.9	35.9	44.2	28.9	27.3
·1만불 달성시 (해당년도)	-	-	30.8 ('86)	23.9 ('78)	21.6 ('78)	19.3 ('81)

* 자료 : Revenue statistics (OECD 2003)

III. 2005년 나라살림의 중점

-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R&D·교육·보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
 -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투자 대폭 확대
 -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지원을 확대
 - 안보여건 변화에 맞추어 자주국방 구축 및 남북협력 지원확대
 - 세무, 건축 등 주요 민원 인터넷 처리 고도화 및 정책품질향상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
 - SOC분야는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해 지하철·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중점 지원
- 예산 외의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
 -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기업의 자체투자 확대 추진

1. 2005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

1-1. 성장잠재력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투자 확대

-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신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확대(1.2→1.5조원) 및 지방 R&D 확충(2.0→2.3조원)
-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1.7→1.9조원)

☐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

- 보육투자를 전년대비 50% 확대하고(4,050 → 6,077억원)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아동중심으로 전환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175억원), 취업유망분야 훈련(428억원)등 청년실업 대책 지원
- 대학 혁신역량, 산·학·연 협력체제 등 인적자원 개발 지원(8,517→ 12,437억원)

☐ 중소기업·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지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2,550억원), 폐수종합처리장(1,388억원), 공업용 수도(395억원) 등 산업기반시설 투자 확대

□ 동북아 경제중심 허브(hub)구축 지원

- 부산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과 인천공항 투자 확대 등 동북아 물류 허브(hub) 구축 지원(8,400→10,502억원)
-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1,100억), 토지 매입비 및 보조금(Cash grant) 지원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지원

- 에너지 절약시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4,699→4,990억원)
- 신·재생 에너지개발, 해외자원 개발 등 에너지 개발 지원 확충(4,955→5,96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예산안	증감액	비 고
1. 미래 성장동력	87,774	96,727	8,953	10.2% 증
■ R&D	70,827	77,868	7,041	미래 신기술, 기초연구 등
■ 정보화 지원	16,947	18,859	1,912	광대역통합망, 전자정부
2. 인적자원 개발	18,979	23,240	4,261	22.5% 증
■ 교육지원	7,236	8,930	1,694	초중등교육, 대학 등 교육지원
■ 여성·보육	4,621	6,620	1,999	여성정책, 영유아보육료
■ 청년실업	6,057	6,504	447	취업유망분야, 중소기업 패키지
■ 농업인문광인 육성	1,065	1,186	121	후계농업인, 문화 전문인력
3. 동북아 경제중심	9,219	13,718	4,499	48.8% 증
■ 물류인프라	8,400	10,502	2,102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공항
■ 외국인 투자유치 등	819	3,216	2,397	토지매입비, 경제자유구역지역 기반시설 등
4. 산업경쟁력	16,573	17,741	1,168	7.0% 증
■ 에너지 개발	9,066	10,165	1,099	신·재생에너지, 유전개발
■ 산업기반	4,738	4,771	33	산업단지 진입로 등
■ 중소기업 육성	2,769	2,805	36	쿠폰제 컨설팅
합 계	132,545	151,426	18,881	14.3% 증

1-2. 삶의 질 향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
(1,400→1,466천명)
- 11세이하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 적용(180천명)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 : ('04) 22천명 → ('05) 202천명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25 → 35천명),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농어촌 복합노인시설 신축(5개소) 등 고령화사회 대비 투자를 확대
- 장애수당의 지급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137→276천명)
- 공부방 지원 확대(월 67→200만원),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월 2→5만원) 등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을 지원

□ 국민건강 증진과 문화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역건강보험 재정소요의 5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질병 예방·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크게 확충
- 주40시간 근무대비 건전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체육·수련시설 등 문화인프라 확충

□ 직불제 강화 등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

-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확대(30~40%)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월평균 1.4→2.2만원)
-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 신규 도입(300억원) 및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면적 확대(4,650→8,278ha)

□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물·공기 등 환경개선 투자 확대

- 화물차·버스의 배출가스 감축장치 부착 지원 등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159→1,300억원)
- 광역상수도망을 지속 확충(2,589→4,611억원)하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 개발을 지원(1,177→1,464억원)
- 생활하수 및 공단 폐수 처리시설 지원확대(11,580→12,326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 기초생활보장	38,306	41,628	·차상위아동 의료급여 확대 등
■ 취약계층 지원	57,537	61,984	·장애수당 137→267천명 ·노인일자리 25→35천명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국민건강 증진	41,749	47,580	·건강증진기금 3,096 중 ·지역건보소요 50%지원
■ 문화·관광	14,249	16,292	·문화예술 4,016→4,520
■ 환경 개선	32,751	37,29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등
■ 농어촌복지	44,984	48,279	·농어민소득 보전·지원 강화
합 계	229,576	253,059	10.2% 증

1-3. 행정 서비스 혁신

□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 (1,026 → 2,043억원)

- 각 부처별 자체 혁신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행정서비스 혁신 능력개발 및 연구사업 활성화 (346억원, 신규)
- 정부업무를 고객입장에서 체계화하고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품질관리제 등 도입 (37억원, 신규)
-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정보·DB시스템을 통합 활용하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지원 (150 → 750억원)
- 성과중심의 효과적인 재정정보 산출을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개발 추진 (33억원, 신규)

□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1,612 → 2,550억원)

- 세무, 건축, 고용, 취업, 무역 등 민생관련 분야의 인터넷 민원 처리를 고도화
 - 2단계 전자정부사업('04~'07, 31개 과제)을 차질없이 지원 (1,177 → 1,944억원)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및 이해도를 제고 (352 → 513억원)

-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참여 포털 구축 (15 → 64억원)
- 건설, 주택, 교통, 세무 등 행정정보 공개 및 정책고객에 대한 홍보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 일잘하는 정부	1,026	2,043	■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1,612	2,550	■ 건축통관국세시스템 고도화 등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352	513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등
합 계 (* 전 자 정 부)	2,990 (1,177)	5,106 (1,944)	70.8%증 (65.2%증)

1-4. 지방분권·균형발전

□ 지방재정 지원규모 확대 : 31.5 → 36.1조원 (14.5% 증가)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방 재정력 확충

□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 지방의 자율재원 규모 확대 : 14.5조원 → 25.6조원
- 용도가 한정된 양여금 폐지 및 국고보조사업중 일부 (163개, 1.1조원)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부세 인상 등 재원도 확충
- * 지방교부세 : ('04) 15% → (양여금 폐지) 18.3% → (보조사업 이양) 19.1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촉진

- 그동안 분산 추진되던 지역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5.5조원 규모로 출범
 - 지역개발 사업은 지자체별 지출한도내에서 자율편성
 -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 특화발전을 중점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 지방교부세	144,806	194,885	교부율 인상 : 15.0→19.13%
■ 지방양여금	43,972	-	'05부터 폐지
■ 국고보조금	126,697	105,037	일부 보조금(0.9조원)이양
■ 균형발전 특별회계	(50,145)	54,980	'05부터 신설(9.6% 증)
■ 담배소비세 인상	-	6,300	'04.10, '05.7 각각 500원 인상전제
합 계	315,475	361,202	14.5% 증

1-5. 자주국방·남북협력

□ 안보여건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 핵심 전력 증강 및 장병 사기 증진 등에 역점

- 조기경보통제기 등 첨단·정보전력 확충(61,930→69,851억원)
- 첨단무기체계 자체 개발 등 국방 R&D 투자 확대
※ 국방비 대비 비중 : 4.2% → 4.5%
- 내무반 침대형 전환 (육군기준 80개 대대, 3,822→5,121억원) 및 사병보급 인상 (월평균 3.5→4.5만원, 2,331→2,998억원)
- 용산기지 이전(1,000억원), 이라크 파병(1,609억원), 특별법 제정 소요 등 특이소요 반영

□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출연금 대폭 확충 (1,714 → 5,000억원)
- 개성공단 건설(285억원), 남북철도·도로 연결(1,421억원)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 확대

(단위: 억원)

구 분	'04 예산	'05 예산안	비 고
○ 국방비	189,412	208,226	9.9% 증
■ 전력투자비	62,930	70,851	·첨단·정보전력 확충, 용산기지 이전
■ 경상사업비	46,771	51,638	·병영시설, 연료·탄약, 급식·피복비 등
■ 인건비	79,711	85,737	·보급, 연금부담금 등
○ 남북협력	7,721	11,837	53.3% 증
합 계	197,133	220,063	11.6% 증

<참고> 주요 국책사업 재정소요

□ 사업계획이 확정된 국책사업(11개)의 '04~'08 국고지원소요 167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반영

○ '04년 27.5조원 → '08년 39.5조원(연평균 9.5% 증가)

* 국가균형발전계획(44.5조원), 농업농촌대책(45.1조원), 동북아물류중심(8.3조원) 등

□ 최근 제기된 국책사업(13개)의 '05년 지원규모는 31.0조원(27.5→31.0조원, 12.8%증)

○ 지역산업 진흥,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 지원(7.4→8.7조)

○ 동북아 물류중심(1.4조원), 농업농촌대책(8.7조원) 지원 등

<주요 국책사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사업기간	'04 예산	'05 예산안	증가율	'04~'08	연평균 증가율
합 계 ¹⁾		27.5	31.0	12.8%	166.7	9.5%
·국가균형발전계획	'04~'08	7.4	8.7	17.8%	44.5	8.8%
·농업농촌대책	'04~'13	7.9	8.7	9.9%	45.1	7.0%
·동북아물류중심	'87~'14	1.2	1.4	13.6%	8.3	14.8%
·자주국방(전력투자)	'04~'08	6.3	7.1	12.6%	41.7	15.2%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²⁾	'04~'30	6.2	7.0	12.1%	38.2	9.8%

1) 국가균형발전계획, 농업농촌대책, 신행정수도건설, 문화비전 등 중복분(총 11.1조원) 제외

2) 국민임대주택, 전자정부 2단계, 신행정수도건설, 빈곤아동청소년대책, 기초생보 차상위 지원, 보육지원, 문화비전·새예술 포함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2-1.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

□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성기금의 사업비를 금년보다 1.7조원 증액 (23.6→25.3조원)

- 서민주거 여건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지원 (4.0 → 4.3조원)
-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완화 및 경영구조개선 지원 강화

	‘04당초	‘04추경	‘05안
■ 중소기업 자금지원	2.8조원	3.4조원	3.4조원

- 농안·수산물발전기금의 사업비를 금년보다 2천억원 수준 증액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2.2 → 2.4조원)

2-2. 기금사업 효율화, 기금존치평가 등 제도개선 추진

□ 적립금이 급속히 늘고 있는 연기금의 장기적·안정적 투자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금관리기본법상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SOC 등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

□ 기금 사업구조를 효율화하고 예산과의 역할분담 확립

- 농안기금의 수산관련 사업(3,888억원)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사업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 기금성격에 적합한 예산사업을 재원여력이 있는 기금으로 이관하여 예산부담을 완화

□ 처음으로 실시한 기금존치 평가를 토대로 기금정비를 추진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제시한 정비방안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기금정비방안을 마련
- 관련 법개정을 거쳐 '06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정비 결과를 반영

IV. 2005년 나라살림의 분야별 지원내용

(단위: 조원, %)

분 야	'04년	'05년	증감	증감률
1. 교 육	24.5	25.9	1.4	5.7
2. R&D	7.1	7.8	0.7	9.9
3. 사회복지	32.4	37.0	4.6	14.4
4. SOC	27.1	27.5	0.4	1.7
5. 농어촌	12.4	13.3	0.9	7.5
6. 산업·중소기업	11.4	11.2	△0.2	△1.6
7. 환 경	3.5	4.0	0.5	13.9
8. 문화·관광	2.3	2.5	0.2	11.3
9. 지역균형발전	5.0	5.5	0.5	9.6
10. 사회안정	7.6	8.1	0.5	7.1
11. 국방비 (일반회계)	18.9	20.8	1.9	9.9
12. 통일·외교	1.4	1.9	0.5	40.7

1. 교 육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 도모

- 대학입학자원 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대학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추진
 - 국립대학간 통합, 국·사립대학 학과(부) 통폐합 등 과감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신규 1,000억원)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내실화 중점 추진
- 이공계열 대학(원)생 무상장학금 지원 확대(10.6→15.9천명) 등을 통해 우수학생의 이공계열 진학을 적극 유도(665→1,006억원)
- 대학원 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1,800 → 2,000억원), 의·치학분야 전문대학원 전환 (55→65억원)의 차질없는 지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혁신과 특성화 중점 지원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 및 신성장동력 창출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2,200 → 2,500억원 (균특회계)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 중심대학 및 학교기업 육성
 -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 300 → 450억원 (균특회계)

□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

- 경상·보급·중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단순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 (교부율 : 13 → 19.32%)
- 초·중등교육 관련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15개 사업, 1,956억원)
-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방교육재원으로 충당 (500원 인상시 3,800억원)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확충

- 저소득층 만5세아(44→81천명) 및 만3·4세아(22→32천명)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
-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공계 무상장학금 지원 (1,500명)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등을 신규 반영 (1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245,453	259,405	5.7%증
○ 예산사업	244,151	258,131	5.7%증
■ 고등교육	15,346	17,065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지방대학 육성(11.2%증)
■ 초·중등교육	1,377	2,057	·유아교육 지원 (345→871억원)
■ 평생직업전문교육	2,357	2,416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1,680억원)
■ 교육교부금	182,684	196,821	·경상·보급·중액교부금 통합
■ 교육양여금	42,386	39,772	·교육세 감소 (6.2%감)
○ 기금사업	1,302	1,274	2.2%감
■ 사학진흥기금	1,302	1,274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비 용자 (1,280→1,250)

2. R&D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집중 투자

-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정보기술(I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중점 지원
 - BcN등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세계적 연구성과를 도출한 복제 및 줄기세포 기반 연구 지원

□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를 지속 지원

- '07년까지 R&D예산의 25%수준 달성을 목표로 이공계대학의 연구능력 배양 및 인력양성을 지원 (20 → 22%)
 - 학술연구조성(2,264→2,339억원), 특정기초연구(640→670억원) 등 기초연구 지원 확충
 - 이공계대학 우수연구센터 (622 →670억원)·국가핵심연구센터 (60 → 80억원) 등 여러 학문분야간 연구사업 지원 확대
- e-Science사업·글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 등 사이버 공간에서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R&D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

□ 지방R&D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주도의 혁신과 균형발전 패러다임 정립을 지원

- '07년까지 R&D예산의 40%수준 달성을 목표로 지방중소기업·지방대학·연구소간의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 (32 → 34%)
- 산학협력 중심대학 (300→570억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391→421억원)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300억원), 지역임상연구센터(30억원), 지역특성화 연구개발(30억원) 등 지역 연구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R&D사업의 효율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41→91억원)
- 출연연구소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연구비 지원방식을 개선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70,827	77,868	·9.9% 증
○ 예산사업	60,995	67,230	·10.2% 증
○ 기금사업	9,832	10,638	·8.2% 증
■ 기초연구	12,374	14,611	·우수연구센터(622→670억원)
■ 지방R&D	19,574	22,640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300→570억원)

3. 사회복지

□ 내년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규모는 37조원(14.4%, 4.6조원 증)

- 연금제도 성숙, 경기부진 등에 따라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이 대폭 확대(23.2→26.9조원, 전체증가액(4.6조원)의 80%)
- 복지분야에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1.2→1.5조원, 29% 증)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투자 확대, 청년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내실화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 (1,400→1,466천명)
- 11세이하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 적용(180천명)
 -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 : ('04) 22천명 → ('05) 202천명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25 → 35천명),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농어촌 복합노인시설 신축(5개소) 등 고령화사회 대비 투자를 확대
- 장애수당의 지급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137→276천명)
- 공부방 지원 확대(월 67→200만원),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월 2 →5만원) 등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아동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육투자를 전년대비 50% 대폭 확대(4,050→6,077억원)

-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60% 미만 계층까지 확대 (전체아동의 24→35%)
-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인상 (각각 보육료의 60%, 40% → 80%, 60%)
- 도시가구 평균소득 미만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신설 (30천명, 월 3~6만원)

□ 국가유공자 예우 개선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

- 독립유공자 예우금 인상(월 20~60→60~100만원), 기본연금 5%, 부가연금 7% 인상 등
- 전역예정자 사회적응교육 확대(700→3,000명),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제대군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지원

- 노사협력사업, 신노사문화 추진,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등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 분쟁조정을 위한 투자 확대
-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이 선호하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 * 취업유망분야(428억원),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175억원), 해외취업(107억원)
- 일자리 나누기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지원 신설
 - * 전문인력 채용지원금(78억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204억원) 등

□ 암관리·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암센터 등 공공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

- 암 무료검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50%), 저소득층 암치료비 신규지원 등 암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사업(80→251억원)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암센터 건립(6개소), 노인전문병원 신축(2개소),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축(4개소)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323,610	370,185	14.4% 증
○ 예산	128,688	136,031	·기금이관 4,820, 지방이양 6,188억원 (‘04년 기준) 미포함
○ 기금	194,922	234,154	·국민연금 등 15개 기금
■ 기초생활보장	38,306	41,628	·기초수급자 +66천명, 만11세 이하 의료급여 적용 173천명
■ 취약계층지원	8,671 (7,305)	9,293 (8,309)	·노인일자리 25→35천명, 장애수당 137→267천명 등
■ 국민건강지원	43,568	49,884	·공공의료 확충 942억원, 건강생활실천 447억원 등
■ 공적연금	139,758	161,270	·국민연금 등 수급자 증가
■ 노동	65,657	77,073	· 산재 5,843억원 증, 실업급여 4,115억원 증
■ 여성·보육	4,556	6,632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향상
■ 국가보훈	23,087	24,405	·기본연금 5%, 부가연금 7% 인상

* 관련기금(15개) : 복지부(국민연금, 국민건강증진, 응급의료), 노동부(고용보험, 근로자 복지진흥,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 여성부(여성발전), 보훈처(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교육부(사학연금), 국방부(군인연금), 행자부(공무원연금), 총리실(복권기금)

4. SOC 분야

□ '05년 SOC 재정 투자(예산+기금)는 '04년 수준 유지
[도로부문 제외시 5.1% 증가]

- '90~'03년간 SOC 예산 증가규모(연평균 16.9%)는 일반회계 규모 증가율(연평균 11.9%)을 상회
 - '00년 국토면적 대비 도로연장 OECD 국가 중 15위
- 이에 따라 SOC 재정투자는 '04년 수준을 유지하되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
 - 민자유치, 연기금 여유자금의 유입 등 예산외의 재원 활용
 - 주공·토공 등 공기업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 SOC 투자확대('05년중 1.5조원 추가 투자)

□ SOC 부문간 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도로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지하철·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SOC 투자의 효율성 제고
 - * 부문별 비중(예산기준) : 도로 48.2 → 44.7%, 지하철 5.2 → 7.3%, 항만 9.9 → 10.3%
- 도로는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추진사업의 완공위주로 투자
 -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파주LCD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 강화(2,445→2,550억원)

- 철도는 도로에 집중된 수송구조 개선 및 장거리·대용량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지속 지원(25,298→25,313억원)
 - 특히, 복선화·전철화 등 기존선 수송능력증대에 중점
- 지하철은 지자체 부채해소 지원소요로 대폭 증대(8,675→12,390억원)
 - 건설비 국고지원비율 인상(50%→60%) 및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상환 지원(지하철 개통후 10년간 이자상환 지원 등)
- 항만은 부산신항(4,358→4,482억원), 광양항(2,668→2,735억원) 등 신항만 중심으로 적극 지원(16,724→17,527억원)
-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 확대(1,374→2,273억원) 및 지방공항 투자규모 조정(1,794→1,226억원)
 -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공항은 완공시기 연장
-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지원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 치수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270,568	275,265	1.7% 증
○ 예산사업	167,745	169,588	1.1% 증
■ 도로	81,154	76,024	·도로부문 투자비중 축소
■ 철도	25,298	25,313	·전라선복선전철화(증1,050억원)
■ 지하철	8,675	12,390	·부산(수영선), 대구(2호선) 완공소요 지원
■ 항만	16,724	17,527	·부산신항(증124), 광양항(증67)
■ 공항	3,617	3,954	·인천국제공항(증899), 일반공항(△568억원)
■ 주택	10,226	10,778	·국민임대주택 건설(증811억원)
■ 수자원	14,773	14,003	·신규 댐 건설 축소
○ 기금사업	102,823	105,677	2.8% 증
■ 국민주택기금	102,823	105,638	·장기 공공임대주택(43,435억원) 등

5. 농어촌

□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

○ 119조원 계획상의 투융자사업은 '04년 대비 10.1% 증가한 8.7조원을 지원(7.9→8.7조원)

■ 농어촌분야 전체 증가율 7.5%보다 높은 수준

	'04	'05	(조원) 증가율
· 농어촌 합계	12.4	13.4	7.5
· 투융자사업(119조 대상)	7.9	8.7	10.1
· 기타(채무상환, 단기융자금 등)	4.5	4.6	2.2

■ 농협자금(1조원)포함, 119조원 계획상 '05연부액 9.7조원 차질없이 지원

○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복지·직불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

■ 농작물 국가재보험기금 신규 설치(300억원) 및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800ha)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30→40%) 등

○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화 지원 확대 (3,092→4,769억원, 농지관리기금)

○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명공학 등을 활용한 R&D 투자 확대 (3,315→3,626억원)

■ Bio장기 생산연구사업(45억원) 등 신규지원

○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수출홍보 및 직수출 지원(108→127억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

□ 국민 식생활 안전 및 재해대비 안전성 제고 투자 확대

- 구제역, 가금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방역 예산 대폭 확충 (277→505억원) 및 우수 농산물 관리제 본격 추진(26억원)
- 초대형 헬기 도입 등 산불 방재 투자 확대(626→702억원) 및 수리 시설 개보수 등 재해방지투자 지속 지원(3,200억원)

□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

- 1천~2천만원 농기계 구입자금을 종합자금으로 신규전환,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실대출 축소
- 328개 RPC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운영자금 지원금리 차등화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119조원 사업)	124,409 (79,107)	133,697 (86,892)	7.5% 증 (10.1% 증)
○ 예산사업	80,994	89,857	10.9% 증
■ 생산기반조성	20,400	19,776	· 중규모용수개발(3,187→2,716)
■ 부담경감·소득보전	24,631	32,629	· 부채대책 등(6,713→9,876) · 직불성 예산(7,779→8,478)
■ 기술개발·인력양성	5,990	6,969	· 농어업 R&D(3,315→3,626)
■ 기타	29,973	30,483	· 생산유통 6,130, 수급안정 14,412 등
○ 기금사업	43,415	43,840	1.0% 증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694	19,152	·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2,505→4,000)
■ 농지관리기금	7,131	9,171	· 영농규모화사업(3,092→4,769)
■ 축산발전기금	7,459	7,133	· 산지생산유통 지원(1,532→1,632)
■ 기타	8,131	8,384	· FTA기금 1,650, 수산발전기금 5,527 등

6. 산업·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으나, 금융지원 제외시 6.1% 증가

- R&D, 수출, 외국인투자 등 산업인프라 구축지원확대(9.5 →10조원)
-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보증 공급 등 금융지원은 적정수준으로 조정(1.9→1.2조원)
 - * 신용보증공급 추이: ('98) 12조 → ('00) 21조 → ('04) 42조원
 - * GDP대비 신용보증비율은 우리나라가 9.8%로서 일본 7.5%, 미국 0.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1,331→1,447억원), 부품소재 기술개발(1,328→1,600억원) 등 R&D기반 확충
- 직무기피요인 해소 (287억원), 인력구조 고도화 (신규 38억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협동화자금 공급규모 확대(1,800→2,400억원)

□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일류상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

-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보조(cash grant) 예산을 신설(50억원)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경쟁 유도
- 한국국제전시장(202억원), 광주국제무역전시장(169억원), Invest Korea Plaza(60억원) 등 무역·투자관련 인프라 확충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50억원),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신규 30억원) 등을 통해 수출형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

□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지속해 나가되, 지원을 내실화

○ 신용보증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 특이요인(P-CBO 관련 지원)에 따른 추경증액분 제외시 '04년 대비 10% 수준 증액

※ ('04본예산)5,900→('04추경)11,400→('05예산안)6,500억

○ 금융기관이 책임을 분담하는 위탁보증제도 등 제도개선 추진

- 시장원리에 따른 민간금융기능 활성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유도

○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3,500→5,100억원)

□ 신·재생에너지 등 고유가 대비 재정지원을 확대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1,757 → 2,387억원)

○ 베트남, 리비아 등 해외자원 개발 지원 확대(3,198→3,57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113,712	111,877	1.6% 감
금융지원 제외시	94,554	100,276	6.1% 증
○ 예산사업	61,800	58,065	6.0% 감
· 산업기술개발	13,800	13,965	·부품소재 1,328→1,600, 산업혁신 3,170→3,450
· 무역·투자유치	4,453	4,280	·외국인투자유치 600→902
· 중소기업 금융지원	14,259	9,571	·신용보증기관 출연 11,400→6,500
· 에너지	21,343	20,384	·석탄공사 용자 1,200→0
○ 기금사업	51,912	53,812	3.7%증
· 중소기업진흥산업기반기금	42,214	42,623	·중소기업 용자 33,870→34,088
· 전력산업기반기금	9,621	11,114	·전원 개발용자 700→1,500
· 특정물질사용기금	77	74	

7. 환 경

□ 맑고 깨끗한 대도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보전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

- 경유차의 배출가스 감축장치 부착(1,618 → 33,926대), 저공해 자동차 보급(200 → 1,150대)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159→1,300억원)
- 대도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청소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2,400→ 2,500대)
- “새집 증후군” 등 신종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관리대책을 신규 추진(45억원)

□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개발 및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

- 광역상수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2,589 → 4,611억원)하고, 농어촌 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 개발을 지원 (1,177→1,464억원)
-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 (11,580→ 12,326억원)하여 수질개선과 함께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 기반조성 및 주민지원 강화(4대강 수계기금, 5,271→6,208억원)

□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투자를 대폭 확대(1,087 → 1,262억원)
 - 국립공원 및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해설요원 운영을 확대(26 → 53억원)
 - 자연생태계 보전과 환경친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편의·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552 → 610억원)
-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285 → 315억원)

□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R&D투자 확대

-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투자를 확대(934 → 966억원)
- 지자체 및 산학협력체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35,142	40,023	13.9% 증
○ 예산사업	29,871	33,815	13.2% 증
■ 상하수도수질부문	21,504	24,188	·하폐수처리장 설치(11,580→12,326)
■ 폐기물 부문	2,803	2,672	·쓰레기 처리시설(1,251→1,077)
■ 대기보전부문	994	2,149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159→1,300)
■ 자연보전 등 기타	4,570	4,806	·생태계 해설요원 운영(26→53)
○ 기금사업	5,271	6,208	17.8% 증
■ 4대강 수계기금	5,271	6,208	·수질개선기반 조성 등

8. 문화관광·체육·청소년

□ 문화향수 기회 확대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

- 초·중·고교 강사풀 지원 확대, 문예시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5→156억원)
-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확대(40→48억원) 및 문화관광 바우처제(문화 40천명, 관광 1,200명) 도입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속 추진

- 방송영상제작시설(154억원) 등 H/W와 창작소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등 S/W(859억원) 병행 지원
- 문화 상품개발 및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문화산업체에 대한 저리 융자도 지속 지원 (515억원)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 건전 여가활동 지원 강화

- 관광자원개발 (1,011→1,183억원), 체육시설 (1,104→1,186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96→379억원), 여가캠핑장 신규 조성 (2개소)
 - 호텔, 테마공원 등 관광시설·기반 확충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 (1,777→2,427억원)
- 생활체육교실 등 참여형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160억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강화 (111→130억원)

□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문화성장거점 육성 및 문화산업 세계화 추진

- 광주 문화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의 전당」 부지매입비를 신규 반영하고, 부산 영상도시 영상센터 건립을 지속 지원
-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연구센터 5개소를 지방대학에 신설
- 2005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적극 홍보 (신규 13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22,596	25,152	11.3% 증
○ 예산사업	12,960	13,713	5.8% 증
· 문화예술문화산업	6,978	7,336	·광주문화중심 100→1,031, 문예시설 735→576
· 관광	1,993	1,893	·관광자원개발 1,011→1,183
· 체육·청소년	1,271	1,616	·청소년시설 96→379, 체육시설 480
· 문화재	2,718	2,868	·문화재 보수정비 1,511, 고도보존 25
○ 기금사업	9,636	11,439	18.7% 증
· 문화예술 진흥	866	1,202	·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40→48
· 문화산업 진흥	593	518	· 문화산업 상품개발 융자 515
· 방송발전	1,333	1,454	· 시청자 미디어센터건립 70→94
· 관광진흥개발	2,972	4,029	· LA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40
· 체육·청소년육성	3,763	4,072	· 축구 인프라구축(신규) 195 ·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113→130
· 문화재(복권기금)	109	164	· 문화재 재해대비 긴급보수 70

9. 지역균형발전

□ '05년 균특회계는 5.5조원 규모로 편성 (50,145→54,980원, 9.6%증)

- 지역개발사업은 지출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편성 (3.3조원)
 - 농산어촌 개발은 소득기반 구축에 중점 지원(14,409억원)
 - 신활력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은 별도 지원 (4,313 → 6,937억원)
- 지역의 특화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과제 사업 적극지원
 - 산업단지클러스터 (300억원), 대덕 R&D특구 (100억원) 등 신규지원
 - 지역산업진흥사업 (4+9개지역) 지원 확대 (2,345 → 3,600억원)
- 지역 인적자원 및 R&D 등 지역혁신역량 확충
 -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2,200→2,50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활성화 (300→450억원) 등 연구·인력개발 분야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지역균형발전 계	50,145	54,980	9.6% 증
■ 농산어촌개발	14,171	14,409	·소득기반구축, 생산기반 정비 등
■ 지역 SOC	12,615	12,490	·국지도, 주거환경개선 등
■ 신활력지역	-	2,000	·기초지자체(70개)의 지역혁신 유도
■ 지역산업진흥	3,565	5,567	·4+9개지역(3,600억원), 산단클러스터 등
■ 지역인력양성	4,180	4,836	·지방대학육성, 지방과학기술혁신 등
■ 지역문화관광 등	15,614	15,678	·관광지개발, 지역환경개선 등

10. 사회안정

□ 법률구조 확대, 재소자 처우개선, 외국인 체류관리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지원 강화

-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자를 전국민의 32.8 → 37.1%로 확대(194→210억원)
-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소자의 처우 및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861→904억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04.8)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 지원 확대(32→54억원)

□ 국민들의 생활안정 및 해상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원강화

-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순찰지구대 확충 및 지역순찰 강화 (2,233→2,453억원)
- 첨단범죄예방을 위해 과학수사장비 보강(51→64억원)
- 해양광역경비체제 구축을 위해 노후함정 교체 및 항공기 도입을 적극 추진(1,067→1,22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75,644	81,020	7.1% 증
○ 법무부	16,097	17,216	· 법률구조 210, 수용관리 904
○ 경찰청	54,241	57,956	· 지역순찰 2,453, 수사장비 64
○ 해양경찰청	5,306	5,848	· 함정건조 1,033, 항공기 190

11. 국 방 비

□ 자주국방 역량확충을 위한 전력투자 강화 (비중 : 33.2→34.0%)

- F15K 전투기, KDX-III 구축함 등 핵심전력에 집중 투자
- 조기경보통제기 등 정보전력 확충사업 본격 추진
- 첨단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해 국방 R&D 확대(비중 : 4.2→4.5%)

□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사기·복지 증진에 역점

- 내무반시설을 침대형으로 전환(육군기준 80개 대대 5,121억원)
 - '08년까지 448개 대대(육군 시설의 40%) 대상으로 개선
- 사병봉급을 1만원 인상(월 3.5 → 4.5만원)
- 전투화, 방탄헬멧, 런닝·팬티 등 품질개선

□ 기타 특이소요 반영

-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52만평) 매입소요 반영
- 이라크 추가파병 실소요 지원 (3,700명, 1,609억원)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제정소요는 연차적으로 지원
- JSA(공동경비구역) 등 주한미군 임무전환 소요 반영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189,412	208,226	9.9% 증
■ 경상운영비	126,482	137,375	· 사병봉급 인상 2,331→2,998 · 사병내무반 개선 3,822→5,121 · 이라크 파병 265→1,609
■ 전력투자비	62,930	70,851	· 첨단·정보전력 확충, R&D 확대

12. 통일·외교

☐ 남북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대폭 **확충** (1,714 → 5,000억원)
- 개성공단 건설(285억원), 남북철도·도로 연결(1,421억원)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 확대

☐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간 연장**
(2개월→3개월)
- **탈북자 정착금** 적정소요 반영
 - ※ 지급대상인원 : ('04) 1,029명 → ('05) 1,512명
- **탈북자 청소년학교** 설립·운영

☐ 국제사회에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이라크 재건지원** 등 개도국 원조 확대
 - ※ KOICA출연 : ('04)1,184억원 → ('05)1,596억원 (34.8% 증액반영)
- 국제기구 분담금도 적정소요 반영
 - ※ ('04) 11,860만불 → ('05) 12,795만불 (미화기준 7.9% 증액반영)

☐ 외교역량 제고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싱가포르, 아세안, 일본 등과 **FTA 협상** 본격화(3.5억원→9.8억원)
- 재외국민보호 **Call Center** 설치운영 지원

□ APEC 등 국가행사 적극 뒷받침

○ APEC 행사관련비용 126억원, 부산시 APEC관련 시설 지원 33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04예산	'05예산안	비 고
합 계	13,818	19,442	40.7% 증
○ 예산사업	4,492	5,242	16.7% 증
■ 통 일	654	574	·남북회담청사확보 완료(△185억원) ·탈북자정착지원 확대(300억원→365억원)
■ 외 교	3,838	4,668	·KOICA출연 확대(1,184억원→1,596억원)
○ 기금사업	9,326	14,200	52.3% 증
■ 남북협력기금	7,067	11,263	·개성공단지원(285억원), 경수로사업(5,092억 원)
■ 국제교류기금	236	409	·재외동포사업이관(133억원)
■ 대외경제협력기금	2,023	2,528	·대개도국차관사업(2,000억원→2,500억 원)

13. 공무원 인건비 및 인력증원

□ '05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 증가율은 6% (17.9 → 19.0조원)

-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4% 수준
- 일률적인 기본급 인상은 지양하고, 1만명 수준의 인력증원으로 행정 서비스 향상, 일자리 나눔에 기여
 -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증원(5,400명), 민생치안 인력보강(경찰·해경 2,600명), 식품안전 연구 등 행정서비스 개선(2,000명)
- 모범공무원 수당(월3→5만원), 위험근무수당(월2~3→3~4만원) 등 일부 수당 인상
- * 민간중견기업(100인이상)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인사위)
('00초) 88.4% → ('03말) 97.3% → ('04말) 97.8

2005년도 국세세입예산(안) 주요 내용

2004. 10.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이 종 규

목 차

I.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 개요 / 53

1. 2005년도 세입 여건	53
2. 총국세 세입예산(안)	54
3. 일반회계 국세세입예산(안)	55
4. 특별회계 국세세입예산(안)	56
<참 고> 2005년 세목별 국세세입예산(안)	57

II.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 주요 특징 / 58

1. '05년 총국세 규모	58
2. 조세부담률	58
3. 국세수입 비중	59
4. 직·간접세 비중	59
<참 고> 세목별 산출방법 요약	60

I.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 개요

1. 2005년도 세입 여건

<경제적 여건>

□ 내년도 우리 경제는 5% 수준의 실질 성장 전망

구 분	2003실적	2004		2005 예산
		예산	전망	
경상성장률(%)	5.4	8.0내외	8.0대	8.0내외
(불변성장률)	(3.1)	(5.5)	(5수준)	(5수준)

- 금년에 비해 수출·입 증가세는 다소 둔화
- 이자율 안정 추세 지속, 부동산 시장 안정
- 2004년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로 2005년 법인세 실적 호조 예상

<재정 여건>

□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감소(△2.7조원)로 재정의 국세의존도 심화

* 일반회계 세입중 국세 비중(국채발행 제외) : ('04) 94.5% → ('05) 97.0%

□ 복지지출 수요 증가, 국정과제 수행 등으로 세출수요 증가

□ 지속적인 감세 요구

2. 총국세 세입예산(안)

□ 2005년 국세세입 전망 : 130.6조원

(단위: 조원)

구 분	2004년 예 산	2005년 예산(안)	'04년 예산대비	%
총 국 세	122.1	130.6	8.5	7.0
○ 일반회계	111.2	121.0 (119.4)	9.8 (8.2)	8.8 (7.4)
○ 특별회계	10.9	9.6 (11.2)	△1.3 (0.3)	△11.7 (3.4)

* ()안은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한 증감액(비율)

□ 2005년 국세수입은 '04년 예산(122조 686억원) 대비

7.0%(8조 5,446억원) 증가한 130조 6,132억원 수준

○ 일반회계는 '04년 예산보다 **8.8%** 증가한 **121조 498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시 **7.4%** 증가

○ 특별회계는 '04년 예산보다 **△11.7%** 감소한 **9조 5,634억원**

-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을 제외시 **3.4%** 증가

* '05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05년 1.6조원)가 일반회계로 전환

□ '04년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증가 예상

○ 소득세는 세율 1%p 인하,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둔화 전망

* 12월 결산법인 535개사 ' 03년대비 ' 04상반기 순이익 89% 증가

3. 일반회계 국세세입예산(안)

□ 2005년 일반회계 국세세입 전망 : 121.0조원

(단위: 억원, %)

	'04년 예산	'05년 예산(안)	'04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 일반회계	1,112,380	1,210,498	98,118	8.8
- 내 국세	940,316	1,018,742	78,426	8.3
- 교통세	97,511	114,929	17,418	17.9(1.1) ^{주1}
- 관세	74,553	76,827	2,274	3.1

주1」 교통세 전체 '04년 예산은 113,649억원으로 '05년 교통세 세수는 이와 비교시 1.1% 증가

□ 2005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은 121.0조원 수준으로 '04년예산대비 8.8%(98,118억원)증가

- 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세입 예산의 증가율(8.8%)은 총국세 증가율 7.0%보다 높은 수준으로
 - 이는 '05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1.6조원)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기인
 - 이를 제외할 경우 일반회계 증가율은 '04년 예산대비 7.4% 증가하는 수준
- 내국세는 '04년 예산보다 8.3% 증가 전망
- 교통세와 관세는 휘발유경유 소비전망과 수입규모 등을 감안시 각각 1.1%(일반회계 17.9%), 3.1% 증가 전망

4. 특별회계 국세세입예산(안)

□ 2005년 특별회계 국세세입 전망 : 9.6조원

(단위: 억원, %)

	'04년 예산	'05년 예산(안)	04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 특별회계	108,306	95,634	△12,672	△11.7
- 주 세	27,969	29,392	1,423	5.1
- 교 통 세	16,138	-	△16,138	△100
- 교 육 세	42,386	39,772	△2,614	△6.2
- 농어촌특별세	21,813	26,470	4,657	21.3

□ '05년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9조 5,634억원 수준으로 '04년예산 대비 △11.7%(1.3조원)감소

○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특별회계 교통세(전체 교통세의 14.2%, 1.6조원)를 제외할 경우 특별회계는 '04예산 대비 3.4% 증가

<참 고> 2005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억 원)

구 분	'04년		'05년 예산	'04년 예산대비		'04년 전망대비	
	예산(A)	전망(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국 세	1,220,686	1,211,561	1,306,132	85,446	7.0%	94,571	7.8%
[일반회계]	1,112,380	1,108,966	1,210,498	98,118	8.8%	101,635	9.2%
내국세계	940,316	951,000	1,018,742	78,426	8.3%	67,845	7.1%
소 득 세	220,077	246,269	254,829	34,752	15.8%	8,560	3.5%
법 인 세	236,081	247,192	263,364	27,283	11.6%	16,275	6.6%
상속증여세	11,954	19,183	19,971	8,017	67.1%	788	4.1%
부가가치세	371,966	352,212	390,381	18,415	5.0%	38,169	10.8%
특별소비세	58,929	46,278	51,339	△7,590	△12.9%	5,061	10.9%
증권거래세	17,899	15,066	16,271	△1,628	△9.1%	1,205	8.0%
인 지 세	4,798	4,578	4,944	146	3.0%	366	8.0%
과년도수입	18,612	20,222	17,643	△969	△5.2%	△2,579	△12.8%
교통세	97,511	88,734	114,929	17,418	17.9%	26,195	29.5%
관 세	74,553	69,232	76,827	2,274	3.1%	7,595	11.0%
[특별회계]	108,306	102,595	95,634	△12,672	△11.7%	△6,961	△6.8%
주 세	27,969	27,379	29,392	1,423	5.1%	2,013	7.4%
교 통 세	16,138	14,685	-	△16,138	△100%	△14,685	△100%
교 육 세	42,386	37,096	39,772	△2,614	△6.2%	2,676	7.2%
농 특 세	21,813	23,435	26,470	4,657	21.3%	3,035	13.0%

* '05년 일반회계 교통세의 경우 특별회계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분이 포함된 수치

II. 2005년 국세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1. '05년 세입예산의 총국세 증가율은 7%로 '04년 증가율 6.5%
보다 0.5%p 상승

□ '05년 총국세수입은 '04년 예산대비 7.0% 증가하여 '04년 세입예산의 국세수입 증가율 6.5%보다 **0.5%p** 상승

* '05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 : ('04) 0.5 ('05) 3.8

* '05년 수출전망(%) : ('04) 30.0 ('05) 8.5

□ 세출예산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세수입을 통해 뒷받침하고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

* '05년 일반회계 예산안(조원, %)

	'04 예산	'05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120.1	131.5	11.4	9.5
■ 국세수입	111.2	121.0	9.8	8.8
■ 세외수입	8.9(국채2.5)	10.5(국채6.8)	1.6	18.0

2. 조세부담률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율 인하(2%p), 소득세율 인하(1%p), 특별
소비세 과세품목 축소 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19.7%)

구 분	'00	'01	'02	'03	'04잠정	'05예산
○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5	19.7	19.7
- 국 세(%)	16.0	15.4	15.2	15.9	15.6	15.5
- 지 방 세(%)	3.6	4.3	4.6	4.6	4.1	4.2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은 '02년 기준 OECD 30개 회원국
(OECD 회원국 평균 27.3%)중 27번째로 낮은 수준

* 1인당 GDP 1만불 시대의 선진국 평균 조세부담율 : 23.9%

3. 총국세중 소득세 비중 감소

□ '05년 국세수입 구성비

(단위: %)

구 분	'01	'02	'03	'04전망	'05예산
○ 소득세	19.5(21.6)	18.4(20.3)	18.1(19.6)	20.3(22.2)	19.5(21.1)
○ 법인세	17.7(19.6)	18.3(20.2)	22.4(21.0)	20.4(22.3)	20.2(21.8)
○ 부가가치세	27.0(29.9)	29.8(32.9)	29.2(33.0)	29.1(31.8)	29.9(32.2)
○ 특별소비세	3.8(4.2)	4.1(4.5)	4.1(4.9)	3.8(4.2)	3.9(4.2)

* () : 일반회계 국세중 구성비

- 소득세율 인하(1%p) 등 세부담 경감 조치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으로 소득세 비중 다소 감소
-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수출증가세 둔화에 따른 환급감소로 부가가치세 비중은 증가

4. 직접세 비중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

- 내년 총조세(국세+지방세) 중 직접세 비중은 52.2%로 '04년 전망치(53.1%)와 비교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 과거 5년 평균('00~'04년 중 51.7%)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직접세 비중(%)

(00) 51.2 (01) 50.4 (02) 50.6 (03) 53.1 (04전망) 53.1 (05예산) 52.2

<참 고> '05년 주요 세목별 산출방법 요약

Ⅷ 법인세

○ 신고분과 원천분으로 구분

- 신고분은 자납, 중간예납, 고지분으로 나누어서 최근 과표 증가율과 납부비율 등을 감안하여 추계
- 원천분은 법인저축성예금 증가율과 이자율 전망등을 사용하여 추계

Ⅷ 부가가치세

○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분

- 국내분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나누어 과표증감율과 수출증가율·설비투자증가율 등을 사용하여 각각 전망
- 수입분은 수입과 환율전망 및 실효세율 등 사용

Ⅷ 소득세

○ 9개 세목별로 세분화하여 각각 추계

- 경상성장률과 임금·금리증감률 등 거시지표와 해당세목의 최근 과표증감율 등을 사용하여 추계

Ⅷ 기타 세목

상속·증여세	■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전년도 실적전망에 5년평균증감율 사용
특별소비세	■ 전년도 실적전망에 경상성장률을 사용
교통세	■ 휘발유와 경유의 수급전망에 과세비율과 실제 세율을 곱하여 추계
주세	■ 전년도 실적전망에 최근 5년 평균증감율 내지 경상성장률을 사용하여 추계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 10.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신 철 식

목 차

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방향 / 65

I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모습 / 67

- 1. 운 용 규 모 67
- 2. 수 입 계 획 68
- 3. 지 출 계 획 69
- 4. 기 금 수 지 70

III. 분야별 중점지원 사업 / 71

- 1. 사회보험 관련기금 71
- 2. 금융성·계정성 기금 73
- 3. 특정사업 지원기금 75

IV.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81

- 1. 운용규모(안) 81
- 2. 수입계획(안) 82
- 3. 지출계획(안) 86

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방향

☐ 재정운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운용 계획을 수립
-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 및 기금관리 주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

☐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용

- 중산기금, 주택기금 등 사업성기금의 사업비를
금년보다 1.7조원 수준 증액

☐ 금년부터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금융성기금과 신설된 FTA이행지원기금·복권기금의 운용체계 확립

- 금융성기금은 정부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관리비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방만한 운용을 방지
- FTA이행지원기금은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중점지원
하고 복권기금은 가용재원을 국민임대주택에 집중 투입

□ 기금 사업구조를 효율화하고 예산과의 역할분담 확립

- 농안기금의 수산관련 사업(3,888억원)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사업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 기금성격에 적합한 예산사업을 재원여력이 있는 기금으로 이관하여 예산부담을 완화

□ 적립금이 급속히 늘고 있는 연기금의 장기적·안정적 투자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금관리기본법상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SOC 등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

□ 처음으로 실시한 기금준치 평가를 토대로 기금정비를 추진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제시한 정비방안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기금정비방안을 마련
- 관련 법개정을 거쳐 '06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정비 결과를 반영

II.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모습

1. 운 용 규 모

□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2조원 (298.3→320.2조원)

- 사업성기금(37개)의 운용규모는 2.2조원 증가 (43.6→45.7조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기금(6개)은 2.7조원 증가 (91.5→94.2조원)
- 계정성기금(6개)은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규모 증가 등으로 23.5조원 증가 (118.7→142.2조원)
- 금융성기금(9개)은 예보채상환기금의 금융구조조정 사업비 감소 등으로 6.6조원 감액 (44.6→38.0조원)

< 2005년도 기금운용규모(안) >

(단위: 조원)

구 분	2004계획(A)	2005계획안(B)	증 감	
			(B - A)	%
합 계(57개)	298.3	320.2	21.8	7.3
사업성(37개)	43.6	45.7	2.2	4.9
사회보험(6개)	91.5	94.2	2.7	3.0
계정성(5개)	118.7	142.2	23.5	19.8
금융성(9개)	44.6	38.0	△6.6	△14.7

2. 수입 계획

□ 자체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는 금년보다 다소 증가

- 자체수입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이자수입 증가(증 4.2조원) 등으로 금년보다 6.0% 증가 (77.8→82.5조원)

□ 예산출연·용자 등 정부내부수입은 9.9% 증가 (78.6→86.3조원)

- 예산출연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 증가 (0.3→2.3조원)등으로 금년보다 2.6조원 증액 (5.0→7.6조원)
- 공자기금 예탁원금회수 등 기타 정부내부수입은 5.3조원 증가 (73.3→78.5조원)

□ 여유자금 회수는 금년보다 7.3% 증가 (65.6→70.3조원)

< 2005년도 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억원)

구 분	2004계획(A)	2005계획안(B)	증 감 (B-A)	
				%
합 계	2,983,462	3,201,808	218,345	7.3
· 자체수입	777,987	824,746	46,760	6.0
· 정부내부수입	785,773	863,193	77,420	9.9
· 예산출연	50,413	76,255	25,842	51.3
· 예산용자	2,740	1,640	△1,100	△40.1
· 공자기금 회수 등 기타	732,620	785,298	52,678	7.2
· 차입금	763,941	810,521	46,581	6.1
· 여유자금회수	655,762	703,347	47,585	7.3

3. 지출 계획

□ 사업비는 금년보다 7.5% 감소 (74.8 → 69.2조원)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금은 연금·보험급여 증가로 18.2% 증가 (17.0→20.1조원)
- 금융성·계정성 기금은 예보채상환기금의 금융구조조정 관련 사업비 감소(△7.5조원) 등으로 30.6% 감소 (34.2→23.7조원)
- 주택기금(증 0.3조원), 건강증진기금(증 0.8조원) 등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전년대비 7.3% 증가 (23.6→25.3조원)

□ 인건비·경비 등 기금운영비는 최대한 절감 (2.3조원)

□ 외평기금의 외화자금 확대 등으로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대폭 증가 (94.2 → 113.7조원)

< 2005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억원)

구 분	2004계획(A)	2005계획안(B)	증 감	
			(B-A)	%
합 계	2,983,462	3,201,808	218,345	7.3
사업비	747,701	691,515	△56,185	△7.5
·사회보험(6개)	169,852	200,820	30,968	18.2
·금융성계정성(14개)	341,764	237,297	△104,467	△30.6
·사업성(37개)	236,085	253,398	17,313	7.3
기금운영비	23,113	22,604	△509	△2.2
정부내부지출 등	1,270,674	1,350,530	79,856	6.3
여유자금운용	941,975	1,137,158	195,183	20.7

4. 기 금 수 지

□ 전체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의 흑자 확대(20.9→24.4조원)에 따라 금년보다 **3.5조원 개선** (△4.5→△1.0조원)

○ 다만, 사업성 기금은 사업비 지출확대에 따라 수지적자가 금년보다 **0.6조원 확대** (△5.4→△6.0조원)

○ 계정성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적자 감소 (△14.2→△13.3조원) 등으로 **1.0조원 개선** (△20.0→△19.0조원)

< 2005년도 기금 수지(안) >

(단위: 조원)

구 분	2004계획(A)	2005계획안(B)	증감(B-A)
합 계(47개)	△4.5	△1.0	3.5
·사회보험(6개)	20.9	24.0	3.1
·계정성(4개)	△20.0	△19.0	1.0
·사업성(37개)	△5.4	△6.0	△0.6

주: 외평기금 및 9개 금융성 기금은 기금수지에서 제외

III. 분야별 중점지원 사업

1. 사회보험 관련기금 (국민연금 등 4대연금, 고용산재보험기금)

☐ 연금·보험급여는 수급인원 및 적용대상 확대 등에 따른 증액 소요를 반영

- 수급인원 증가 등에 따라 연금·보험급여를 금년보다 증액 계상
-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대상을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 대상에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5인 미만 농림어업 근로자 등을 추가

<사회보험 급여 대상인원 및 지급액>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04(A)		'05안(B)		증 감(B-A)	
	대상인원	지급급여	대상인원	지급급여	대상인원	지급급여
합 계	2,564	117,119	3,016	139,918	452	22,799
국민연금	1,400	31,263	1,703	38,256	303	6,993
공무원연금	209	41,972	232	47,317	23	5,345
사학연금	19	6,132	20	7,370	1	1,238
실업급여	605	11,561	685	15,676	80	4,115
산재급여	331	26,191	376	31,299	45	5,108

□ 실직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실직자 훈련수강료 지원단가 인상(1인당 월 25→29만원) 등 실직자 재고용 지원을 강화 (1,155→1,189억원)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한도를 높이고(납부보험료의 270→360%)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 (208→238억원)

□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환경 개선신규업종 진출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379억원)
 - * 전문인력 채용시 1인당 120만원/월
신규업종 진출로 고용창출시 1인당 60만원/월 등
- 교대제 전환(2~3 → 3~4조)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지원 (신규, 123억원)
- 고령자·여성가장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장려금 지급 기간 6 → 12개월, 30~60만원/월)

□ 재해율이 높은 영세사업장 위주로 산재예방 투자를 강화

-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3D업종 Clean 사업장 지원을 확대 (700→1,000억원)
- 산재환자의 재활 및 생계안정 지원 강화 (778 → 950억원)

2. 금융성·계정성 기금 (9개 금융성기금, 복권기금 등)

가. 금융성기금의 운용체계 정립

☐ 5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기본재산을 확충

- 신보·기신보는 중소기업에 40조원 수준의 대출보증을 지원
- 담보는 없으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평가보증규모를 대폭 확대 (1.7→2.7조원, 기신보)
- 농어민 영농자금, 주택건설·전세자금 등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반영 (9조원 규모 보증지원)

☐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상환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 소요를 반영

-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보채상환기금의 금융기관 출자·출연 지원을 7.5조원 축소 (8.2 → 0.7조원)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연차별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른 지원 소요를 반영 (14.2 → 13.3조원)

☐ 금융성기금 관리비는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방만한 운영을 방지 (0.9→0.8조원)

나. 복권수익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 내년도 복권수익금의 감소 전망에 따라 복권기금의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조정

	'04계획(12월분) ¹⁾	'05계획	증△감
■ 복권 판매수입(A, 억원)	36,203	29,735	△6,468
■ 복권 발행비용(B)	23,651	19,110	△4,541
■ 복권 수익금(A - B)	12,552	10,625	△1,927

1) 9개월분으로 반영된 '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을 12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

□ 복권사업은 변동성이 큰 복권수익금 특성을 감안하여 경상 사업보다는 국민임대주택 등 투자사업 위주로 반영

- 9개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수익금의 30%)을 제외한 가용재원의 65%를 국민임대주택에 투입

	'04년	'05안
■ 국민임대주택 지원액(지원비율)	3,851억원(56%)	4,834억원(65%)

- 나머지 가용재원의 35%는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지원 등에 중점 배분

* 소외계층 복지(1,066억, 14%), 국가유공자(379억, 5%), 문예진흥문화유산보존(662억, 9%) 등

	합계	국민임대주택	소외계층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예진흥	재난지원 등
* 금액(억원)	7,437	4,834	1,066	379	662	496
(비율, %)	(100)	(65)	(14)	(5)	(9)	(7)

3. 특정사업 지원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7개 기금)

가. 서민 주거안정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15만호(국민임대 10만호, 공공임대 5만호)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 (40,398 → 43,435억원)
-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도시영세민과 근로자·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 (9,500 → 15,700억원)

☐ 중소기업 융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자금(16,700 → 17,000억원) 및 협동화자금(1,800→2,400억원) 지원 확대
- 현재 조성된 자금으로 자체 운용이 가능한 지방중소기업 예탁금은 지원중단 ('04년 2,800억원)

* '04. 6월 현재 총 4.2조원 기조성

☐ 중소·벤처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창업을 지속지원(3,500억원)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소상공인자금 지원 확대 (3,500→5,100억원)

나.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자 단체의 활동 지원을 강화

- 생산자단체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유통 전문조직 지원을 대폭 확대 (2,505→4,000억원)
- 국제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농산물 비축사업비를 증액 (3,312→3,555억원)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에 역점

- DDA 쌀협상에 대비해 쌀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영농규모화 사업 확대 (3,092→4,769억원)
- 한·칠레 FTA체결을 계기로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집중지원 (1,554→1,607억원)
- 효율적인 수산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일원화 (3,888억원)

□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가축방역 및 해양오염 방지사업 적극 지원

-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조직 강화 (방역요원 175→205명, 검사보조원 신규 100명)
-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확대(10→13억원) 및 적조 발생 제어장치 설치사업 신규지원 (5억원)

다. 세계일류 정보화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저변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미래유망 IT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3,756→4,277억원)
-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성과를 도출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 (65→265억원)

□ 산업체의 수요에 맞춘 IT 고급인력 양성

-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IT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인력공급망 관리시스템(SCM) 구축 확대 (182→212억원)
- 대학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지속 지원 (320억원)

□ 청소년의 과학마인드 확산 및 과학기술 체험공간 대폭 확충

- 과학기술인의 초·중·고 강연 확대(@120만원 / 300→750개교) 등 과학 기술문화 창달사업 지원 확대 (204→301억원)
- 국립과학관 및 지방과학문화시설 건립을 대폭 확충 (309→622억원)

라. 문화관광분야 육성 및 청년실업 해소

☐ 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순수예술 발전 지원

- 게임·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보급, 유통구조 현대화 중점 지원 (515억원)
- 문학·미술 등 순수예술 창작지원(122→376억원) 및 교도소·고아원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40→48억원)

☐ 관광산업의 기반 강화 및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

- 관광홍보(TV·신문), 해외관광문화센터 설치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588억원)
-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단지, 중저가호텔 등 관광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 (1,777→2,427억원)
-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잔디·우레탄 운동장 및 축구공원 등 건립 지원 (707억원)

☐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

-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연 2,240명의 인턴사원 채용 지원 (129억원)
- 청년실업자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 (6개월 → 3개월간 실업시 지급, 1년간 1인당 월 30~60만원)

마. 여성발전, 청소년 육성 및 장애인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지원

- 여성 기술인 창업자금 대출 지속 지원 (100억원)
-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법률구조사업 지원 확대 (8→11억원)

□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지원 확대 (111→130억원)
- 근로자의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개소, 50억원)
-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금 신설 (1인당 연 120만원, 137억원)

바.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 남북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교류협력 인프라 구축 지원

-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등 교류협력 기반조성 지원 확대 (1,515→1,781억원)
- 비료지원, 식량차관 등 인도적 지원 확대 (2,920→3,365억원)

사.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

□ 흡연을 감소를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

- 금년중 법률을 개정하여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고 내년도에도 500원 추가 인상을 추진

* 인상분의 50%는 국민건강증진기금, 50%는 지자체 재원 확대에 충당

□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은 건강보험 지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보건의료분야에 투자

- 암 무료 검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 50%), 저소득층 암 치료비 신규지원(폐암환자 등) 등 암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역암센터(6개), 노인전문병원(2개) 등 공공의료기반을 확충(979억원)하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확대 (74→251억원)
- 기금의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 (0.6→1.1조원)
 - (현행) 지역급여비에 대해 예산 40%, 기금 10% → (변경) 예산 35%, 기금 15%

□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부족한 인력·장비·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 (110억원)
-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구급대 장비지원 확충(159→163억원)

IV.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運用規模(案)

(단위: 억 원, %)

구 분		2005년 계획		2004년 계획		증 감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율
운용규모		3,201,808	100.0	2,983,462	100.0	218,345	7.3
수입	○ 자체수입	824,746	25.8	777,987	26.1	46,760	6.0
	○ 정부내부수입	863,193	27.0	785,773	26.3	77,420	9.9
	○ 차입금	810,521	25.3	763,941	25.6	46,581	6.1
	○ 여유자금회수	703,347	22.0	655,762	22.0	47,585	7.3
지출	○ 사업비	691,515	21.6	747,701	25.1	△56,185	△7.5
	- 사회보험성기금	200,820	6.3	169,852	5.7	30,968	18.2
	- 금융성·계정성기금	237,297	7.4	341,764	11.5	△104,467	△30.6
	- 사업성기금	253,398	7.9	236,085	7.9	17,313	7.4
	○ 기금운영비	22,604	0.7	23,112	0.8	△509	△2.2
	○ 정부내부지출 등	1,350,530	42.2	1,270,674	42.6	79,856	6.3
	○ 여유자금운용	1,137,158	35.5	941,975	31.6	195,183	20.7

2. 收入計劃(案)

가. 총괄

(단위: 억원, %)

구분	2005년 계획		2004년 계획		증 감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율
합계	3,201,808	100.0	2,983,462	100.0	218,345	7.3
○ 자체수입	824,746	25.8	777,987	26.1	46,760	6.0
○ 정부 내부수입	863,193	27.0	785,773	26.3	77,420	9.9
- 예산출연	76,255	2.4	50,413	1.7	25,842	51.3
- 예산용자	1,640	0.1	2,740	0.1	△1,100	△40.1
- 기타	785,298	24.5	732,620	24.6	52,678	7.2
○ 차입금	810,521	25.3	763,941	25.6	46,581	6.1
○ 여유자금회수	703,347	22.0	655,762	22.0	47,585	7.3

나. 기금별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기 금 명	자체수입	정 부 내부수입	차입금	기타여유 자금회수	합 계
합 계 (57개)	824,746	863,193	810,521	703,347	3,201,808
□ 사회보험 기금	449,481	85,896	377	406,639	942,394
1. 국민연금기금	286,620	66,958	-	257,189	610,766
2. 공무원연금기금	61,960	13,221	377	18,166	93,725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2,830	5,222	-	26,545	54,597
4. 군인연금기금	42	102	-	281	425
5. 고용보험기금	36,902	226	-	82,636	119,764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127	168	-	21,822	63,117
□ 사업성기금	217,071	41,137	111,436	87,638	457,283
7. 대외경제협력기금	732	2,050	-	3,375	6,157
8. 사학진흥기금	1,279	300	-	331	1,910
9. 남북협력기금	254	14,536	-	1,760	16,550
10. 국제교류기금	494	-	-	405	899
11. 군인복지기금	3,426	214	-	1,630	5,270
12. 방위산업육성기금	335	-	-	11	345
13. 과학기술진흥기금	1,389	545	-	2,824	4,757
1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21	-	-	29	1,651
15. 관광진흥개발기금	3,444	-	-	1,592	5,036

(단위: 억 원)

기금명	자체수입	정 부 내부수입	차입금	기타여유 자금회수	합 계
16. 국민체육진흥기금	2,377	471	-	2,583	5,431
17. 문화산업진흥기금	477	-	-	1,189	1,665
18. 문화예술진흥기금	400	498	-	4,583	5,481
19. 청소년육성기금	501	60	-	2,180	2,741
2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8,260	-	-	1,939	20,200
21. 농지관리기금	8,314	5,830	-	905	15,049
22. 축산발전기금	5,612	-	-	3,617	9,229
23. 쌀소득보전기금	262	314	-	1,057	1,633
24. FTA이행지원기금	35	1,600	-	27	1,662
25. 전력산업기반기금	10,981	-	-	7,011	17,992
26.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45	-	-	197	242
27. 정보화촉진기금	8,982	5,061	-	1,645	15,688
28. 국민건강증진기금	16,429	-	-	949	17,378
29. 응급의료기금	22	500	-	61	583
30. 금강수계관리기금	564	-	-	53	617
3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400	-	-	211	1,610
3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67	-	-	25	492
33. 한강수계관리기금	3,356	-	-	132	3,489
3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975	361	-	1,755	3,092
35. 임금채권보장기금	1,594	313	-	2,236	4,143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690	1,022	-	294	3,007
37. 여성발전기금	73	117	-	187	377

(단위: 억원)

기금명	자체수입	정 부 내부수입	차입금	기타여유 자금회수	합 계
38. 국민주택기금	82,939	5,386	79,000	37,878	205,203
39. 수산발전기금	4,602	400	-	1,108	6,110
40. 보훈기금	1,767	394	-	1,275	3,436
4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	54	-	79	138
4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0,394	1,091	32,436	1,800	65,721
43. 방송발전기금	1,574	20	-	704	2,298
□ 재정성기금	78,630	588,584	624,308	130,394	1,421,916
44. 공공자금관리기금	32,385	213,293	612,808	1	858,488
45. 외국환평형기금	15,842	219,000	11,500	130,332	376,674
46. 공적자금상환기금	139	148,981	-	-	149,121
47. 양곡증권정리기금	3	7,310	-	60	7,374
48. 복권기금	30,260	-	-	-	30,260
□ 금융성기금	79,565	147,575	74,400	78,677	380,217
49. 기술신용보증기금	8,813	3,500	-	1,205	13,518
5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542	4,000	-	3,586	10,128
5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236	1,000	-	566	2,802
52. 신용보증기금	20,012	3,000	-	13,229	36,241
5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954	1,300	-	5,091	10,345
5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7,043	132,869	74,400	26,970	251,281
55. 수출보험기금	3,879	1,406	-	7,458	12,743
5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16	500	-	600	1,216
57. 부실채권정리기금	21,969	-	-	19,973	41,942

3. 支出計劃(案)

가. 총괄

(단위: 억원, %)

구분	2005년 계획		2004년 계획		증감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율
합계	3,201,808	100.0	2,983,462	100.0	218,345	7.3
○사업비	691,515	21.6	747,701	25.1	△56,185	△7.5
- 사회보험성기금	200,820	6.3	169,852	5.7	30,968	18.2
- 금융상계정성기금	237,297	7.4	341,764	11.5	△104,467	△30.6
- 사업성기금	253,398	7.9	236,085	7.9	17,313	7.4
○기금운영비	22,604	0.7	23,112	0.8	△509	△2.2
○정부내부지출 등	1,350,530	42.2	1,270,674	42.6	79,856	6.3
○여유자금운용	1,137,158	35.5	941,975	31.6	195,183	20.7

나. 기금별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기금명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 계
합 계 (57개)	691,515	22,604	1,350,530	1,137,158	3,201,808
□ 사회보험 기금	200,820	8,302	2,171	731,101	942,394
1. 국민연금기금	38,525	4,021	-	568,221	610,766
2. 공무원연금기금	79,491	688	671	12,874	93,725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0,702	584	1,500	31,812	54,597
4. 군인연금기금	-	-	-	425	425
5. 고용보험기금	27,014	870	-	91,879	119,764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5,088	2,139	-	25,890	63,117
□ 사업성기금	253,398	5,683	121,859	76,341	457,281
7. 대외경제협력기금	2,500	28	1,304	2,326	6,157
8. 사학진흥기금	1,250	24	548	89	1,910
9. 남북협력기금	11,247	16	3,795	1,492	16,550
10. 국제교류기금	352	57	-	490	899
11. 군인복지기금	3,760	-	-	1,510	5,270
12. 방위산업육성기금	342	-	-	3	345
13. 과학기술진흥기금	2,786	7	1,000	964	4,757
1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576	29	-	46	1,651
15. 관광진흥개발기금	4,023	6	-	1,007	5,036

(단위: 억원)

기금명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 계
16. 국민체육진흥기금	2,783	708	200	1,740	5,431
17. 문화산업진흥기금	515	3	-	1,147	1,665
18. 문화예술진흥기금	1,067	136	-	4,279	5,481
19. 청소년육성기금	576	5	200	1,960	2,741
2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8,670	482	-	1,048	20,200
21. 농지관리기금	8,750	421	5,825	52	15,049
22. 축산발전기금	7,090	44	69	2,026	9,229
23. 쌀소득보전기금	966	23	-	644	1,633
24. FTA이행지원기금	1,607	43	-	13	1,662
25. 전력산업기반기금	11,038	76	-	6,878	17,992
26.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70	4	-	167	242
27. 정보화촉진기금	8,786	204	5,800	898	15,688
28. 국민건강증진기금	14,225	42	-	3,111	17,378
29. 응급의료기금	490	5	-	87	583
30. 금강수계관리기금	601	16	-	-	617
3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76	34	-	-	1,610
3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75	17	-	-	492
33. 한강수계관리기금	3,414	74	-	-	3,489
3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407	106	673	906	3,092
35. 임금채권보장기금	1,727	137	300	1,978	4,143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454	321	40	191	3,007
37. 여성발전기금	303	2	-	72	377

(단위: 억 원)

기금명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 계
38. 국민주택기금	92,057	1,693	72,777	38,676	205,203
39. 수산발전기금	5,517	10	-	584	6,110
40. 보훈기금	2,389	17	-	1,030	3,436
4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3	2	-	83	138
4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5,794	599	29,328	-	65,721
43. 방송발전기금	1,162	292	-	844	2,298
□ 계정성기금	181,232	799	979,521	260,364	1,421,916
44. 공공자금관리기금	25,000	1	833,487	-	858,488
45. 외국환평형기금	1,900	1	115,220	259,553	376,674
46. 공적자금상환기금	132,869	-	16,251	-	149,121
47. 양곡증권정리기금	-	-	7,311	63	7,374
48. 복권기금	21,462	798	7,252	748	30,260
□ 금융성기금	56,065	7,820	246,979	69,352	380,217
49. 기술신용보증기금	10,592	1,790	-	1,137	13,518
5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6,221	573	-	3,334	10,128
5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212	-	-	591	2,802
52. 신용보증기금	20,102	3,296	-	12,843	36,241
5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450	451	633	3,812	10,345
5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890	404	243,878	109	251,281
55. 수출보험기금	4,399	587	600	7,157	12,743
5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0	50	-	965	1,216
57. 부실채권정리기금	-	670	1,868	39,404	41,942

「2005년도 예산안」 검토과제

2004. 10.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신 해 룡

목 차

제1부 총괄분석

I. 2005년도 경제전망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 95	
1. 국내경제 현황 및 2005년도 경제전망	95
2.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분석	96
II. 2005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수지 / 97	
1. 세수전망과 세입예산안 분석	97
2.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 건전성 분석	99
III.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 100	
1.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100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101

제2부 중점 및 부문별 분석

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 104	
II. 부문별 재정분석 / 106	
1. 통일·외교분야 재정분석	106
2. 국방분야 재정분석	106
3. 교육분야 재정분석	108

4. 문화·관광분야 재정분석	109
5.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110
6. 노동분야 재정분석	111
7. 여성분야 재정분석	112
8. 환경분야 재정분석	112
9.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재정분석	114
10. 농어촌분야 재정분석	114
11. 사회간접자본분야 재정분석	115
12. 과학기술분야 재정분석	116
13. 정보화분야 재정분석	116

제3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I. 총괄분석 / 118
- II. 기금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19
- III. 연기금 투자폴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20
- IV. 기금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20
- V. 국민연금기금 / 121

제1부 총괄분석

I. 2005년도 경제전망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1. 국내경제 현황 및 2005년도 경제전망

수출 및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하반기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상반기(5.4%)에 비해 낮아진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세계 IT 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어 2005년 중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진작정책과 가계 유동성 제약의 완화로 소비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부담의 지속으로 민간소비는 2005년중 2.8%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내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세계 IT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둔화, 국내 제조업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확산 추세, 기업경영의 보수화 경향 등으로 올해보다 낮은 4.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주택가격 안정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경기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2005년중 2.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어서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취업유발효과가 큰 소비부문의 점진적 회복으로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3.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요측 압력도 미약하여, 2005년 중 연간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중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고유가로 인한 원유수입부담의 증가로 138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분석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수행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충격지수(FI: fiscal impulse measure)를 이용하여 재정운용의 기초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재정은 경기 대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 수단은 지출확대였고, 이러한 정책이 경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5년 재정운용 방향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세출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기준으로 2005년도 폐지되는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할 경우 7.5% 증가하였다. 조속한 경기회복이 국가정책목표 달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5년도 재정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과 함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2005년도 예산안의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정부예상보다 낮을 경우 총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05년도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확대 정도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현재 수준보다는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총지출규모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본지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지출에서 경상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자본지출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상지출의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고 자본지출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할 분야는 즉각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SOC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 총규모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지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른 부문의 지출 증가를 일정수준에서 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5년 예산안에서는 SOC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출 등의 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소생산성, 인적자본 등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5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관련 예산이 5.7%(지방교육양여금 제외시 8.2%), R&D 관련 예산이 10.2%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예산안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재정 운용의 예와 같이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향후 재정이 경제 안정화 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규율의 확립은 결국 재정적자의 통제방안으로 귀결된다. 재정적자의 통제방안은 크게 보아 적자상한선을 두는 정책과 지출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두 정책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해 본 결과, 지출상한선 정책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조절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I. 2005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수지

1. 세수전망과 세입예산안 분석

본 절의 목적은 국회예산정책처(NABO)에서 자체 개발한 세수추계모형과 정책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행정부의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2004년도 세제개편을 평가하는 데 있다.

행정부의 예산안과 NABO 세수전망과의 차이는 전망의 전제 조건과 전망에 사용한 모형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NABO 전망은 경제 지표에 대한 가정에 따라 1안, 2안, 3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수전망을 예산안과 비교함으로써 정책 판단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2005년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가정을 1안에서 4.5, 2안에서 4.9, 3안에서 5.4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2005년도 국세세입 예산안은 2004년 예산에 비해 7%가 증가된 113조 6,132억원으로, 2004년 세입예산 증가율인 6.2%보다 0.8%포인트 상승하였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8%, 9조 8,118억원이 증가된 121조 4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년부터 교통세가 모두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11.7% 감소한 9조 5,634억

원 이다. 이를 NABO의 2005년 1안 전망결과와 비교하면, 정부의 총 국세 규모가 약 2조원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NABO 전망의 차이 규모는 -1.56%이다. 보다 낙관적인 거시지표 전망에 근거한 NABO의 2005년 2안과 3안의 전망과 정부 예산안과의 차이규모와 차이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2안과의 차이규모는 1조 5천억원 수준이고 차이율은 -1.15%이며, 3안과의 차이규모는 8,900억원 수준이고 차이율은 -0.68%이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위해 전제한 거시경제 지표가 NABO의 3안과 비슷하거나 다소 낙관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를 살펴보면, 정부 예산안 대비 NABO 전망의 차이율은 전제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0.7%에서 1.47%인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3% 후반에서 -2% 에 달한다. 한편 총 국세에서 약 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NABO의 전망 결과가 정부 예산안 보다 약 9%가량 작아서 차이율은 전제 조건에 따라 -9.1%에서 -8.57%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와 NABO의 2005년 소비지출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5년도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2004년도의 세제개편은 NABO의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세수입 감소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2004년도 세제개편이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법인세 2%포인트와 소득세 1%포인트를 인하하면 2005년에 법인세 세수입은 약 7,316억원이 감소하며, 소득세 세수입은 약 6,185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로 인한 2005년도 GDP는 세제개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약 0.09% 증가할 전망이다. 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상위 소득계층의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하위 소득계층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2004년도 세제개편은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소득분배 측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4년 세제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02년 기준으로 조세지출규모가 관련 국세대비 13%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기반을 위축시키고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면서 대규모 세수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2.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 건전성 분석

예산안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전망이 중요하다. 국내외 기관들의 2004년과 2005년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보다 경제성장이 낮게 이루어져 정부의 예상보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국가채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정부 스스로 어려운 정책선택의 난관에 직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2005년에 이르러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정부는 경상가격기준으로 2조 720억원, 크게는 3조 7,14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경상가격기준으로 3조원이 넘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소하기에는 큰 규모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적인 적자 국채발행, 세입 확대, 세출 억제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적인 적자 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규율을 떨어뜨리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된다. 추가적인 적자 국채발행은 국가채무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방안이다.

세입 확대나 세출 억제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다. 세입 확대의 방안으로서 조세감면을 제한하고 징세노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세출 억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중에서 가장 유효한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세출 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세출 억제 요인들을 식별하고 확인하여 재정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의 모색은 단순히 2005년 예산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항이다.

III.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외환위기 이후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2000년 76.3조원에서 2003년 140.6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 성장둔화 등으로 세입기반은 악화되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연금재정수지의 압박, 통일비용의 증대 등 다양한 세출증대 요인이 잠복해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이런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중기적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단년도에 국한한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세입 및 세출 여건, 국가 우선순위, 재정건전성 위협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중전과는 달리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총량목표의 관리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원배분계획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단년도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하는 기본 틀로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성공은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가 정착되어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지출상한(ceiling)이 정해지는 반면 지출상한 안에서는 부처가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보다 우월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처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도 예산작성 과정에서 잠정지출한도를 활용한 결과, 각 부처의 예산증액 요구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부처 스스로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을 신청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2003년 3월 건교부 등 22개 부처가 성과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당부처는 2004년 5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05년 재정집행 후 2006년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아래에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려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한 중기적 관리목표가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닐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국회심의 참고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성과관리제도 역시 이제 막 시범적으로 대상기관을 정해 실시하고 있는 단계

에 불과하고 성과계획서 자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재정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은 중장기적 예산의 성격을 띠지만 현재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제출일정 조정, 사전 협의의 제도화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재정당국의 중기세입추계에 의한 세입의 계획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일반회계 세입은 7.9%, 특별회계 세입은 1.8%, 기금세입은 8.6%가 될 전망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1999년~2003년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 1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계획기간중 공기업지분 매각완료, 한은 잉여금 감소 등 세외수입 감소 등에 따라 세입여건은 종전에 비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을 연평균 7.4% 수준보다 낮게 통제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관리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핵심적 부분의 하나이다. 재정당국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흑자를 제외한 후 공적자금 상환 소요에 따른 재정적자를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이를 배제한 것을 “관리재정수지”라 부르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계획기간중 세수부족을 충당하는 적자국채를 2005년까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6.8조원까지 늘리겠지만 그 이후 그 폭을 줄여나가서 2008년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목표도 2004년 0.9%, 2005년 1.0%, 2006년 0.6%, 2007년 0.3%로 잡고, 2008년에는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2004~2008년 동안 매년도 국가채무의 규모를 GDP의 30%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204.5조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2008년까지 약 100조원 증가한 296.5조원 규모로 관리하여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이 2004년 26.2%에서 2006년에 30%에 근접하는 29.8%에 이르겠지만, 그 후 계속 줄어들도록 관리해 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006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대폭

증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반해 재정수지 적자폭의 대폭 감축은 2007년 이후에서야 나타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전반기에 재정적자가 용인되는데 반해, 후반기에 들어와 상대적인 긴축을 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전망치만큼 되어 주지 않거나, 후반기에 새로운 재정소요가 발생할 때 실제로 세출의 증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중기세입여건에 대한 전망에 따라 총수입을 얻을 수 있고, 목표하고자 하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수준을 정하고 나면, 각 연도별로 총재정지출규모가 결정된다. 재정당국에 의하면 계획기간 중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규모는 5년간 1,110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가운데 총계기준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5년간 706.4조원이며 연평균 7.4%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향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목표 관리 계획이 우선적 목표인 만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지출규모는 향후 성장률과 수입 전망이 달라짐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제정될 국가재정법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런 원칙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충족, 국방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분야에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6.3%를 초과하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투자감소에 따른 성장둔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따른 국방에 대한 재정증대 필요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SOC, 농어촌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주도 개발시대에 재원이 집중 배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투자의 양적 증대가 아니라 투자를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분야는 연평균 2.9% 정도로만 재정투입을 늘려나가고 있다. 즉 재정의 평균증가율 6.3%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이 분야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될 것이다.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는 연평균 총재정지출 규모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인 7.0%, 6.1% 정도의 지출규모 증가를 해나갈 계획이어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분야, 재원배분 비율이 감소할 분야, 그 수준을 유지할 분야 등으로 나누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최소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향후

세입여건이 전망보다 나쁠 경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목표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원칙을 기본 틀로 삼아 세출을 재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재원배분의 비중이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의 내실화,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도 이런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제2부 중점 및 부문별 분석

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200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이다. 균특회계가 제도의 취지대로 잘 운용되면 지방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소기의 성과달성을 위해 고려해야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보면 지역개발사업계정의 경우 시도별 총액배분을 함에 있어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적 등 평가에 있어 기존 낙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의 객관적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예산편성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각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에도 관련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기관을 거치는 동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의 본질이 흐려질 염려도 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조정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앙부처의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더라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은 부처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므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관련 기관들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지출한도내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위 선심성이나 이벤트성 사업추구에 대한 유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한도내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균특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예산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회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도 포괄되어야 하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2005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적시되고 있지 않아 총체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향후 균특회계 투자계획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어 연도별 계획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균형발전 추진 주체와 재정당국 간의 사전협의를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투자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긴밀한 협의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균특회계의 재원규모를 보면, 기존에 여러 회계에 걸쳐 있던 사업들을 통합한 수준일 뿐 특별히 이를 위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원부터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는 식의 운용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예산낭비의 소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의 성격상 지역별, 부문별, 사업별 등 재원배분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통·폐합 및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지역별 재원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5년도 균특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개발사업계정중 3조 3,322억원에 대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down)를 실시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신활력지역 예산을 2,000억원 신규 지원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균특회계의 예산안 편성이 올해 처음 실시됨에 따라 준비부족으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다소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간 총액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여진 주민안전 예산규모의 축소 등 지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더불어 현재 지방이 충분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소관부처의 급격한 역할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규 계상된 신활력지역 지원 예산의 경우는 지역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이 불비한 지역을 고려하는 통합적 균형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기본취지는 타당하나 재원이 우선 마련되고 사업이 나중에 고려되는 경우이므로 향후 사업선정과정에서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지역별로 총액 배분된 예산안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삭감 증액 하는 등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총액배분 예산안도 이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시 총액배분의 확정과 지방의 자율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실질적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I. 부문별 재정분석

1. 통일·외교분야 재정분석

통일·외교 분야는 북핵문제라는 정치적 이슈와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라는 경제적 이슈가 병존하고 있으며 경제규모와 이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외교 분야의 재정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외교 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 등 공적개발원조(ODA)의 증가로 2002년도 이후 정부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왔다. 통일 분야는 남북화합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의 남북협력기금 출연 및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남북간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기금 수요가 증대되어 왔으나 2001년도 5,00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04년도에는 1,714억원에 머물렀다.

통일·외교 분야 예산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동이나 정치적 변수에 따라 그 변화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가속화, 더 나아가서는 갑작스러운 통일 등 여러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상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 분야 예산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통일비용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남북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참여기업의 수익성 보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대 경협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이를 통한 이윤 창출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2. 국방분야 재정분석

정부는 단년도 위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제거와 각 부처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보장 및 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5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인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틀 속에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방분야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 및 주한미군의 병력감축에 대비하고, 자주적 선진 국방의 조기 구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국방비 증가율을 전체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2005년도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2004년 대비 9.9% 증액된 20조 8,226억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국방분야와 관련하여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지출 규모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고,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는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수 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은 물론 총사업비 규모의 산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셋째,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 속에서 2005년도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예산소요가 내재되어 있다. 즉, 2005년도 국방부 세출예산안에는 미군기지이전 비용 1,000억원, 군인연금 부족분 보전금 8,564억원, 의원입법소요 1,000억원 및 이라크 파병소요 1,60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닌 수 년에 걸쳐서 그것도 해를 거듭할 수록 소요예산이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지출 규모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은 물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문별로는 군인연금의 부족분 발생문제가 국방예산 운영상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군인연금의 심각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가입자 기여금과 국가부담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군인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방분야의 의원입법 소요예산은 총규모가 5,604억원에 달해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 사업 가운데 삼청교육피해자 보상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업무는 관련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도 국무조정실 예산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방위비분담금 예산도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상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분리되는 것은 부처간 업무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육분야 재정분석

2005년도 교육분야 재정분석은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현황과 국제비교를 통한 교육재정의 문제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교육재정 투자계획, 그리고 2005년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국가재정의 16~17% 수준의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나 아직도 공교육 부문에 대한 저투자와 저효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교육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은 학부모의 높은 교육투자(민간부담률 3.4%)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8.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적 투자가 요구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연평균 7.9% 증가하여 2004~2008년간 5년 동안 총 142조 6,65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에 의한 연도별 재정지출한도액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교육 투자의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성과관리제 도입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이 낙관적인 청사진 제시에 머무르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을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육투자의 핵심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가 소홀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사업 투자비 6.9% 수준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자원배분으로 부족한 편이며,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내실있는 프로그램과 투자계획의 수립이 요청된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27조 9,660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교육부 예산의 85%가 지방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어렵고, 특별교부금 비율이 9.09%에서 4%로 대폭 줄었으나 특별교부금에 해당하는 7,800억원 정도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총액을 포괄적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의 사각지대로 남게된다. 고등교육 부문 투자는 전년보다 15.5% 증가하여 지방대학 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대학 지원 사업 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대학이 지역을 살린다는 관점보다 지방대학의 학문 분야나 특성화가 지역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초·중등교육 사업 중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투자 사업의 실

효성은 검증이 거칠 필요가 있고 유아교육 지원 871억원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으나 절대액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실업계고교 교육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과는 별도로 실업교육의 정책방향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고 전문대 특성화 사업의 지원방식을 소규모 분산지원에서 집중지원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4. 문화·관광분야 재정분석

복잡한 정책추진체계와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화분야는 국가재정운용의 변화 속에서 재정운용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틀인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분야는 연평균 약 7%의 재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재정 지출의 확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분야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부처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준차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금을 정비해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관 5개 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문화분야는 향후 재정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정운용의 변화는 공공부문의 조직 운영과 역할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며, 이에 대해서 문화분야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5년도 문화관광부의 예산안은 1조 2,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2005년도부터 신설·운용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화관광부 사업은 3,801억원 규모이다. 문화관광부 소관 5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조 353억원으로 계획 되었다.

과거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으로 지적되어 온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지방보조 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에 의해 편성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수행될 것이다. 시행 첫 해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화분야 사업은 사업 선정에 있어서 특별회계 취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보조율과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부의 업무 영역 중에서 정책적 관심이 가장 적은 분야가 중무 분야이다. 1실, 1관, 2과의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비전 없이 집행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중요성에 걸맞게 정책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조직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보건복지분야 재정분석

2005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 소관의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출한도는 정부 총 재정지출의 7.1%에 해당하는 14조 6,899억원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전년대비 총 지출규모 증가율은 국가전체 총 지출규모 증가율 6.3%의 두배 반이나 되는 15.1%를 기록하고 있다.

첫째, 2001년 이래 보건복지분야 재정운용에서는 의료보장부문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부문의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2005년도 보건복지부 재정은 전년대비 1조원 이상의 복지부문사업이 여성부 및 지방으로 이관되어, 복지사업집행 기능이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되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장부문 투자비중이 약 2/3에 이르게 됨으로써,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의료비 재정부담이 향후 복지재정 운용에 미치게 될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 복지지출 수준의 33~42%,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당시 선진국 복지지출 수준의 36~84%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는 만큼,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 중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복지재정지출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2008년까지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재정 운용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특징적이다. 사회보험재정의 비중 증가와 복지사업 집행기능의 지방 이양 등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 집행 등에 쏟았던 노력을 국가의 핵심적 복지정책 및 사회보험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결집시켜, 부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핵심적 사회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 범위와 국민건강보험 재원조달에 관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동 정책은 보건복지분야 재정운용에서 투자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과제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수준의 공적부조 적용범위, 2006년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투자규모와 방법 등을 포괄하는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건복지분야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현실성 있는 생계급여지원액과 비수급 빈곤계층문제가 재정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2005년 5조 2천억원에 이르는 의료보장부문 재정부담 및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의료비 절감 내지 증가율 완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수행이 강조된다. 우선

적으로는 예산과 기금을 합하여 3,300억원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부문 재정투자를 대폭 증가시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비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사업비의 75%를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에, 16%를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의료사업에 배분하고 있다. 본연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10%에도 미달하는 만큼,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사업우선순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2005년 정부 총재정지출의 0.06% 수준인 1,181억원의 식약청 소관 재정지출 한도는 조정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의약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 행정 수준의 제고가 절실한 만큼, 식품·의약품 안전성 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식약청 소관 재정지출한도를 50% 이상 증액되도록 하여 점차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6. 노동분야 재정분석

노동부 재정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5개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재정운용의 특징은 다른 부처와는 달리 예산사업보다는 기금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의 2005년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운용 규모는 20조 1,375억원으로 이 중 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8,254억원인 반면에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19조 3,121억원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의 노동부의 재정운용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노동부의 재정운용은 기금사업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2005년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노동분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투자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그 동안 노동분야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향후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총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규모의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셋째 회계·기금별 투자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도 노동분야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기금의 과다한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적합성,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타당성 미흡과 부처간 중복, 그리고 노동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미흡 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7. 여성분야 재정분석

출산을 감소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육정책은 여성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중기적 관점의 재정운용에 따라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육분야의 재원 배분은 사회복지분야의 타 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도 보육 분야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50.1% 증가한 6,0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에는 2004년 보육예산의 두배에 달하는 8,500억원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재원 배분은 보육분야의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육정책은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은 정교한 보육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 정책이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편성된 2005년도 보육예산안은 예산규모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책의 틀이나 예산구조는 큰 변화가 없다. 또한, 보육정책 수행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보육 수요조사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분야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육 정책은 아동이나 여성을 넘어 가족과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분야이며, 이와 같은 정책적 인식에 따라 재정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향후 확대되는 보육 재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 전략과 사업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8. 환경분야 재정분석

가. 환경 전반

환경분야의 재정구조는 2005년도부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함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던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

입예산 재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5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1조 4,493억원에 비해 약 2배에 해당하는 2조 8,324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5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입예산의 61%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개선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환경분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총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규모의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투자재원의 조달계획이 불투명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도 환경부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환경관련부담금의 부과체계, 도·농간 편차 해소를 위한 상하수도 부문 예산편성,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폐기물 부문 예산안 조정,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위한 투자,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나. 수질분야

본 예산분석은 환경부의 4가지 성과목표인 수질관리기반 구축, 사전예방적 관리, 수질오염원 저감, 수질개선 참여유도라는 성과목표 체계에 근거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사업과 4대강수계관리기금사업을 분류한 다음, 각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목표 달성에 실패한 원인을 파악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대책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200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질관리기반 구축관련 사업은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사업을 기축으로 하여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상하수도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관련 사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총괄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예방적 관리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을 기축으로 하여 관련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녹조방지사업·수변녹지조성사업·오염하천정화사업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수질오염원 저감 관련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양여금폐지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한 것인데, 그동안 관리소홀로 집행부진에 따른 과다 이월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사업성과 및 사업의 수행 가능성에 기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마련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거나 개선이 화급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수질오염원 저감 관련 동일사업에 대해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동시에 지원하고 있어 통합 관리를 요한다.

넷째, 수질개선 참여유도 관련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유사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기금사업과 예산사업 간의 업무상 연계가 없어 사업수행에 애로가 있으므로, 4대강 수계관리기금사업과 연계 관리 내지는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재정분석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여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투자계획의 재원산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공표가 되지 않고 있어 재정투자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 국가재정계획의 총 지출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8%로, 기타 분야에 비하여 산업·중소기업의 재정투자 계획이 미비하여 향후 국가경쟁력의 성장동력 창출을 기하기 위해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재정투자계획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산업자원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타부처 소관사업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 특별회계의 설립목적인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 타부처 소관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지원사업은 일반회계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분리되어 계상되어 있는 바,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지원사업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함께 계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0. 농어촌분야 재정분석

정부가 2004년 10월에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농어촌분야의 예산은 향후 2008년까지 연평균 3.7% 수준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반면 투융자사업의 경우 농업분야 119조원사업과 수산분야 12조원사업은 연평균 7.2% 수준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과거 13년간 이루어진 농어촌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은 98조 8,810억원이며, 재정투입을 기능별로 구분해보면 생산기반조성이나 유통개선과 같은 투융자사업은 재정투입 총액의 59%를 차지하고, 이차보전 및 채무상환과 같은 경직성사업은 재정투입 총액의 41%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농림부예산의 경우 더욱 심해, 2003년의 경우 경직성사업의 비중이 농림부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

농어촌분야 재정투입은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과 같은 경직성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제약을 초래하는 경직성사업은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인 경직성사업인 양곡수매자금지원사업은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이라는 정책목표하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은 정책목표의 상충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쌀소득안정대책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상충되는 경직성사업으로서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사업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11. 사회간접자본분야 재정분석

1999~2005년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예산과 결산을 분석한 결과 최근에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방향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이 제도적으로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려면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절차를 법제화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의 종래의 산업기반시설 위주에서 생활기반시설로의 확대, 사업시행방식의 건설-이전-임대(BTR) 방식의 도입,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의 설립,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적용 등이 도입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로 인해 민간자본 투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음, 국가재정에서 사회간접자본을 적정 규모로 억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의 제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주택기금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사업 등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서민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법령에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 수립될 「국가

재정법시행령」에 사업평가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인 투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키우는 지름길이므로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건설 지원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2. 과학기술분야 재정분석

우리나라의 R&D 투자와 관련된 지표중 일부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R&D 총투자의 절대규모 및 누적규모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 일본 등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R&D 분야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8.7%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1971~2002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28.3%와 1998~2003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14.4% 보다는 낮은 것이다. 또한, R&D 분야 재정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은 2003년도에 3.8%였던 것이 2006년도에 이르러서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가장 낮는데, R&D 분야의 재정투자에 대한 획기적인 확대 방안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육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13. 정보화분야 재정분석

우리나라는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의 결과 공공부문 정보화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IT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투자는 IT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나있는 정보화 분야의 재원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

이며, 이로 인해 2008년도의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비중은 1.2%에 불과하여 2001년도 2.3%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계획이다.

부문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보다는 부처별·단위 업무별 DB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계획이며, 정보화 역기능 해소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 비중도 정보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3.4~5.8%에 불과하여 미래성장을 견인할 기술개발 분야와 더불어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부문에 집중투자 하겠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정책방향 및 재정 투자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된 이후 관련 소과제의 사업내용과 예산을 행정자치부가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IT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선결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유사 사업을 고려한 사업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제3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I. 총괄분석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회의 심의 대상인 운용기금개수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9개 금융성기금이 포함되어 총 57개로서 2004년도에 비해 6개가 증가하였다. 기금운용규모는 총 320조 1,808억원으로, 2004년도 298조 3,462억원에 비해 21조 8,345억원이 증가하여 7.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57개 기금의 2005년도 자체수입은 82조 4,746억원으로 2004년 77조 7,987억원과 비교할 때 4조 6,760억원이 증가하여 6.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자체수입 중 부담금은 66조 2,744억원으로 2004년 60조 5613억원 대비 5조 7,131억원이 증가하여 9.4%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비는 69조 1,515억원으로서 2004년도 74조 7,701억원에 비해 5조 6185억원이 감소하여 7.5%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정부내부지출 등은 135조 530억원으로서 2004년도 127조 674억원보다 7조 9,856억원이 증가하여 6.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여유자금운용은 2005년도 113조 7,158억원으로서 2004년 계획 94조 1,975억원에 비해 19조 5,183억원이나 증가하여 20.7%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금운용정책의 수입측면에서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체수입의 77~80%를 차지하는 부담금의 경우, 기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대비 미미하게 증가(20.3%→20.7%)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련 부담금의 정비방향과 함께 구체화될 수입구조에서의 상충관계(trade off) 즉 ‘부담금 감소와 자체수입 증가’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기금의 지출측면에서 2005년도 여유자금운용 비중은 2004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사업비 비중을 상회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금성기금의 여유자금운용은 단기적으로는 국공채 등 다양한 채권시장에의 편중투자로 시장금리를 적정수준보다 낮춤으로써 여러 측면에 걸쳐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계약저축(contractual savings)의 형태로서 국

공채·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예산·기금이 동일시되는 재정운용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사업 등에 대한 정비 및 역할 분담을 통한 기금·예산사업의 효율적 조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부담금 등으로 초래되는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여유자금운용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예산제도와 예산사업구성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포트폴리오(portfolio) 예산편성」의 결합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예산구조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 기금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57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13조 7,158억원으로서 전체 기금 운용규모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기금의 금융자산은 192조 4,014억원으로서 전체 기금 자산규모의 4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자금 및 투자자산 운용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금 자산운용의 개선은 기금 재원의 확대를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7개 기금의 관리주체로부터 자산운용 자료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기금 자산운용의 문제점은 구체적인 자산운용지침의 미비, 자금 수지계획에 따른 단기자금과 여유자금 구분의 모호, 정책적 배려에 의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융자산배분 원칙과 위험관리시스템의 미비, 자산운용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성과평가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자산운용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기금의 경우 기금 자산운용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산운용 담당자의 자의적 결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며, 대규모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갖추어 투자심의위원회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산 배분 정책, 자체운용과 외부 위탁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기금 투자폴의 개선이 전제된다면 연기금 투자폴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기금 투자폴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기금투자폴제도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되어 초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으나 SK글로벌과 LG카드채 사태 이후 손실이 발생하고 예탁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투자폴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투자폴의 통합펀드 형태의 운영체제가 시장 충격에 취약한 가운데 현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 9월 현재 투자폴에 참여하고 있는 49개 기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금들의 투자폴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며 상당 수 기금들이 투자폴 운영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들의 투자폴의 참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기금들은 투자폴 활용도가 자산운용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투자폴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체제로는 투자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리스크관리를 체계화하고 펀드운용이나 하위운용사 선정에 있어 안정성을 강화하여 기금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투자폴 활용도를 자산운용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여 기금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수익·위험 수준에 따라 투자폴 상품을 다양화하고 개별기금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복수의 주간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기금들에 대한 자산운용 교육 및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만 투자폴이 원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이 보장될 것이다.

IV. 기금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중앙 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전체 부담금 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부담금에 비해 사용 용도가 특정사업에 한정되므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정비가 필요하다.

2004년 10월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부담금은 총 102개로서 2003년도

에는 8조 8,193억원을 징수하였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부담금 금액은 2004년도 5조 996억원에 비해 23.5%가 증가된 6조 6,237억원이며, 기금수입계획안 총액인 45조 5,257억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 부담금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의 기금 부담금 증가율은 17.2%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의 내국세수입 증가율인 9.1%에 비해 훨씬 높았다.

부담금의 부과요율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금전체 지출액 대비 여유자금운용비율을 살펴보면 국제교류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임금채권보상기금 등은 여유자금운용 비율이 2005년도 전체 지출 계획안의 50%를 상회하여 향후 부담금 부과요율의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의 부과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재원과 사업 간의 연계여부를 분석한 결과 카지노사업자납부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재원이 특정사업과 연계되기 보다는 국가전체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조세로 전환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V. 국민연금기금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 금액의 총 규모는 61조 766억원이다. 조달 계획에서는 연금보험료 수입 20조 6,904억원, 운용 수입 8조 1,102억원, 원금 회수 32억 1,486억원이며, 운용계획에서는 연금급여 등 사업비 4조 2,546억원, 여유자금 운용 56조 8천억원이다. 첫째, 공적연금가입자의 93%를 포괄하며 국회 심의 57개 기금 중 가장 자산운용규모가 큰 거대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중기기금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둘째, 재원 조달의 핵심인 연금보험료 징수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이 75% 수준이다. 징수율을 5% 제고시키면, 보험료 수입은 약 2,700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연금관리업무 수행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셋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등 2005년 기준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2005년이면 전국민 연금이 실현된 지 7년째를 맞는 만큼, 경제적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넷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직원 1인당 관리대상 인원이 타 공적연금관리공단의 2~3배에 이르며, 가입자 소득과약 등 업무 특성에서도 상

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직무진단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인력과 조직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입자를 만족시키는 국민연금 행정서비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여유자금 운용에서는 주식투자가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한 5조원 규모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의 90%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지만, 운용수익률은 투자비중이 7% 미만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주식수익률의 등락과 맥을 같이 한다. 2004년에도 8월까지 기준시, 주식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냄으로써 총 운용수익률은 전년대비 2.5% 포인트 낮은 5.3%를 기록하고 있다. 수익률 제고와 자산의 안정적 운용이 조화를 이루는 중장기 투자정책과 전략적 자산배분안이 요구된다고 본다.

